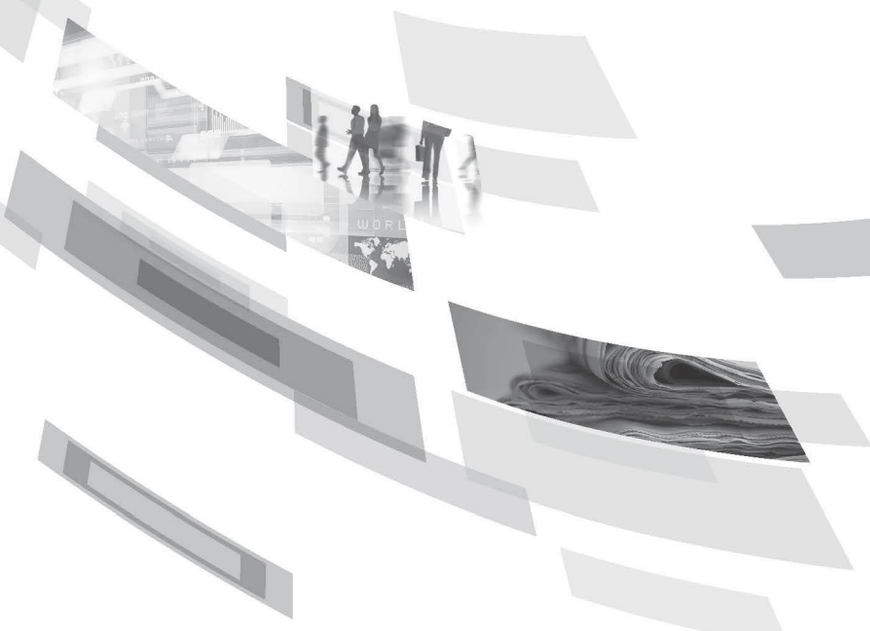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2014-1175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주 문〉

경북일보 2014년 5월 30일자 2면 「젊은층과 소통 '김관용 라이브 TV' 인기 상종가」 기사와 제목, 6월 3일자 2면 「김관용, 노란 울타리 등 이색 공약 '화제'」 제목의 기사, 6월 4일자 2면 「"당선되면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 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월 30일자〉=『김관용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도민 특히 젊은 층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한 '김관용의 라이브 TV' 인기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스타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관용의 라이브 TV' 는 김 후보가 도민 특히 젊은층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이어 개설한 소통의 공간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함께 개설된 이 채널은 '프로펠라 확 돌려야 …' 등 김 후보의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 한마디 한마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요즘 이 채널에 새얼굴이 등장했다. 김 후보의 유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서는 나타나는 한 주인공. '김관용! 김관용!' 우렁찬 목소리로 김 후보를 연호한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강산씨(34·경산시 (주)오션산업 대표이사. 사실 그는 22일 이후 김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지역의 어르신들은 가까이 와서 자세히 살펴보고 손도 잡고 간다. 그가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영락없는 외국인(?)이 '김관용'을 외치기 때문.

하지만 그는 엄연한 한국인이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귀화한 그는 현재 경산에서 사업을 하며 100만달러 수출탑까지 받은 무역 역군이기도 하다.

김씨는 김 후보의 다정다감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매력에 빠져 자원봉사로 선거에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56591&news_area=020〉

〈6월 3일자〉=『'할매·할배의 날' '통일대박연구소' '노란울타리'….'

김관용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연일 내놓고 있는 이색 공약이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도민의 마음을 잘 안다', '재밌다', '참신하다', '궁금하다' 등 반응도 제각각이다.

이런 공약들은 김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정책홍보담당자들은 열띤 토론을 거쳐 가장 도민들에 가슴에 쏙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낸다.

FTA로 걱정하는 농민을 위해 체결 국가별 피해에 대한 전문가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FTA 특공대', 종가·사찰·약선음식 등 경북만의 특색 있는 명품음식 7가지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일곱색깔 무지개 밥상' 등이 바로 그것.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대박연구소'와 도민 안전 의식을 위한 '노란울타리' 공약도 있다.

이들 중 반응이 좋았던 것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조손과의 만남을 확산시키기 위한 '할매·할배의 날' 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버르장머리 교실'. 특히 '버르장머리 교실'은 공약이 알려지면서 도내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겠다는 주문이 쇄도했다. 안전 공약인 '노란울타리의 날'과 안전보좌관 '노란울타리 특보'는 신선했다는 반응을 들었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56880&news_area=020〉

〈6월 4일자〉=『김관용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3일 "예비후보 등록부터 지금까지 도내 곳곳을 누비며, 많은 도민들과 만났다"며 "당선이 되면 도민의 바람을 도정으로 연결해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아침 오전 선거관계자와 지지자 등 60여명과 도청 강당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아 분향을 마친 후, 영덕 강구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울진을 거쳐 포항 흥해를 돌아 저녁 늦게 경주에 도착한 그는 마무리 유세에서 "예비후보 등록 후 대한민국의 5분의 1이나 되는 큰 경북을 매일 260~270km 정도 강행군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선대위 '큰바위 얼굴과 친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후보는 이어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 치러진 선거이기에 가능한 조용하게 운동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늘 노란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를 기획한 것도 선거를 마무리 하면서 세월호 영령들을 추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도민 안전'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주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도민을 만나기 위해 다닌 거리는 1만2천km, 본선 기간에만 4천여km. 세월호 여파로 선거운동이 잠시 중단된 20여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260~270km 정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도민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57025&news_area=02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30일자 신문을 비롯, 투표 전날과 당일인 6월 3일과 4일자 신문 2면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가운데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만을 돋보이게 소개하는 위 적시 상자 기사들을 잇따라 게재했다.

5월 30일자 신문에서는 가로 3단 크기의 큼지막한 사진과 더불어 『젊은 층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한 '김관용의 라이브 TV' 인기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거용 메시지를 리드로 내세우면서 제목도 「젊은층과 소통 '김관용 라이브 TV' 인기 상종가」라고 달았다.

6월 3일자 신문에서는 『'할매·할배의 날', '통일대박연구소', '노란울타리'』 등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을 감성적 표현에다 긍정적 평가를 곁들여 소개했고, 6월 4일자 신문에서는 김 후보의 마지막 날 유세를 2단 크기의 사진과 더불어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경북일보는 그러나 경쟁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 정의당 박창호 후보 등 다른 3명의 선거 관련 소식은 위 3일치 신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처럼 잇따라 계속된 불공정한 제작 행태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4년 2월 19일자 A6면 「6·4선거 후보에 듣는다 ⑥경남도지사/홍준표 現지사/"대권 꿈 없다고 말하면 위선"」 제목의 기사와 시리즈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역시 돌직구였다. 말을 빙빙 돌리는 대신 거침없는 강속구를 날렸다. 그는 요즘 새누리당 모습에 대해 "도전할 생각을 안 한다. (보수적)가치를 위해 싸울 생각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자 "정치인이 그런 꿈이 없다고 말한다면 위선"이라며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또 여의도 정가에 있을 때 당내 경쟁자로 꼽혔던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창원시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다. 차라리 (친가의)고향인 함안에 가서 군수나 하면 좋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매일경제는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경남도청 서울본부에서 홍 지사를 인터뷰했다.

- 경남지사 재선 나선 이유는.

▶2012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탓에 임기가 1년6개월뿐이다.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나올 당시 경남에서 5년가량 봉사하고 서울로 간다고 했다.

- 그럼 3선 생각은 안 하나. 대선 출마도 고민해봤나.

▶재선도 모르는데 3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통령 도전에 대한 꿈은 당연히 있다. 꿈이 없다고 한다면 위선이다. 다만 시기를 봐야 하고 정치적 운도 있어야 하니 기다려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사직 차이는.

▶중앙에서 정치할 때와 달리 직접 정책을 집행하니까 즐겁다. 국회에서는 지시하더라도 결과물을 기다려야 하는데 도지사는 생각하는 대로 정책을 직접 집행하니까 보람 있다.

-지사로서 기억에 남는 일은.

▶경상남도의 빚 2171억원을 갚았다. 또 거가대교 건설을 위해 37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으로 2조7000억원을 민자사업자에 주기로 했는데 협상을 잘해 오히려 1200억원을 받기로 고쳤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폐업하면서 당·청에도 알리지 않았다. 위험 부담은 나 스스로 졌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부채 축소 계획 일환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진행됐다. DJ(김대중), MB(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강성 노조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못 했던 것을 내가 했다.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하고 붙어서 멀쩡한 정치인은 홍준표뿐이라고 하더라.

-새누리당에서 부족한 점은.

▶진주의료원도 그렇지만 여당이 도전할 생각을 안 한다. 가치를 위해 싸울 생각을 안 한다. 보수적·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싸워야 하는데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있다. 그러면 당이 계속 어려워진다.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은.

▶'경남 미래 비전 50년'이다. 경남이 4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군 산업체제로 먹고살았는데 이것을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개편하자는 것이다. 진주·사천의 항공산업, 밀양의 나노융합산업, 거제의 해양플랜트, 산청·함양·거창의 한방 항노화산업, 마산의 로봇비즈니스벨트, 남해·통영·고성의 관광휴양단지 건립 등이다. 또 최근에 미국 20세기폭스 사장단을 만나 35억달러 규모의 진해 테마파크 투자 의향을 받아냈다.

-안상수 전 대표와 박완수 전 시장 연대를 어떻게 보나(홍 지사는 안 전 대표와 당 대변인, 원내대표, 당 대표 등을 놓고 경쟁해온 사이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당 대표까지 한 분의 기초단체장 도전이다. 인생 마지막 봉사라면 (친가의)고향인 함안에 군수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향후 정치적 포석을 둔 출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쟁자(박 전 시장)에 대해 거론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He is…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5~18대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당대표 △경남도지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6300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4일자부터 「6·4선거 후보에 듣는다」는 기획 시리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그 여섯 번째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 홍 지사의 말을 인용해 그의 치적과 공약을 알리고, 현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매일경제는 그러나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경선이 끝날 때까지 홍 지사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에 대해선 해당 기획으로 다루지 않았다. 두 사람 간 경선은 홍 지사에 대한 위 기획 기사가 보도된 이후 25일 만인 4월 14일 실시됐다.

따라서 위 기사와 시리즈는 경쟁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기사인데도 상대후보에게 최소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4년 3월 24일자 5면 「의정부 예비후보 법조계 출신 등장 '눈길' /道북부지방법무사회 김광호 지부장, 광역의원 출사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4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의정부 예비후보들 가운데 참신한 법조계 전문직 후보군들이 등장해 눈길.

최근 공천신청을 마감한 새누리당은 의정부지역에서 시장 후보 4명, 광역의원 후보 7명, 기초의원 후보 14명이 공천심사를 신청.

신청자 대부분이 전·현직 시·도의원들과 지방선거 재수생(?) 등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전문직 정치신인의 출사표에 술렁.

특히 법조계 출신 정치신인으로 의정부 제3선거구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김광호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의정부양주지부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

의정부토박이인 김 지부장은 검찰공무원 시절부터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 받아왔고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온 인물.

여기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의정부 새누리당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가운데 최고 학력의 소유자.

김 지부장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생각해오다 출마를 결심했다"며 "법조계 경력을 살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

김 지부장 외에도 의정부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변호사 경력의 새로운 정치신인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공천여부에 관심이 집중.』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33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6·4 지방선거에서 의정부 지역 새누리당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천신청을 한 경기북부지역 법무사회 김광호 의정부양주지부장을 얼굴 사진과 과찬에 가까운 표현을 곁들여 가로 4단 크기의 면 머릿기사로 큼지막하게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 지역의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는 시장 후보 4명, 광역의원 후보 7명, 기초의원 후보 14명 등 모두 25명이지만, 중부일보는 '참신한 법조계 전문직 후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김 지부장만을 기사에 등장시켰다. 그리고 기사의 큰 제목과 소제목도 「의정부 예비후보 법조계 출신 등장 '눈길'」, 「道북부지방법무사회 김광호 지부장, 광역의원 출사표」라고 달았다. 김 지부장을 위해 '독상'을 차려준 셈이다.

하지만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법무사인 김 지부장의 출마가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참신'하고, 무엇 때문에 '눈길'을 모으며, 지역정가를 '술렁'이게 하는 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기사에는 없다.

기사는 김 지부장에 대해 『검찰 공무원 시절부터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 받아왔고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왔다』고 최상급 수식어까지 사용해 소개했지만 그 같은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의정부 새누리당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가운데 최고 학력의 소유자』라는 특이한 소개를 덧붙였다. 선거 관련 기사에서 대학원 졸업을 후보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며 '최고 학력의 소유자'라고까지 치켜세우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관적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불공정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

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5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5월 13일자 1면「서울시장 정몽준 對 박원순」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과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엄마도 대학교 MT 갔다올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신문

1963년 10월 15일 第3種郵便物認可 19731號
1904년 7월 18일 창간 구독·배달 080-233-4967
seoul.co.kr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

유가족들 자살 시도 이어 자원봉사자 극단적 선택
심리상담 32%가 고위험군… 집중 진료·관리 시급

세월호 참사 유족 3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 분야의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징후가 높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을 포함한 심적 고통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최근 경기 안산 단원고 유족들의 잇단 자살 시도와 우울증을 앓던 자원봉사자의 자살로 2차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유족과 생존자, 그들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자원봉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안산에 거주하는 유가족 238가구 중 면담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 가구를 제외한 161가구(약 68%)에 대해 직접 면담을 통한 심리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상담을 받은 가구 중 32%는 자살 징후나 PTSD 증상을 보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진도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에게는 내과·정신과 의료진이 하루에 2차례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PTSD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가 잠재돼 사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진도 심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한 심리 상담을 하고 시신 확인 시 동행하고 있다"며 "장례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아들과 부인을 잃은 전재영(53)씨는 "당시 심리 치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많은 사람이 혼자서 앓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며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은 전문가들에게 털어놓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신민영 국립서울병원 심리적 외상 관리팀장은 "때때로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나 불신이 상담사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지려면 현재 상담사와 의료진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희 서울여자간호대 교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이 고베 대지진 이후 '마인드케어센터'를 만들어 지역 시민들이 협력해 일어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檢 "소환 불응 유씨 장남 체포영장"

한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이날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핵심 피의자인 대균씨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새누리당 정몽준(왼쪽) 의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는 도중 막내아들의 '국민이 미개인' 막말 논란을 언급하다가 울먹이며 눈물을 닦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확정된 박원순(오른쪽) 시장이 이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김기웅·정현선씨도 함께 예우

박지영 정현선 김기웅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탈출을 돕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등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던 승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민간 잠수부 이광욱(53)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경기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들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1종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또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시장 정몽준 對 박원순

鄭 득표율 71%로 김황식에 압승
오늘 野 전북 확정… 대진표 완성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12일 선출됐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현 시장에 이어 정 의원이 여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4년간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아울러 13일 새정치연합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 전국은 '지방 권력' 쟁탈을 위한 선거 국면에 일제히 돌입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에서 71.1%를 획득, 각각 21.3%와 7.6%에 그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을 큰 격차로 누르고 후보로 뽑혔다.

정 의원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본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서울시를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 구별하는 역사적 선거"라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울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관련기사 3·8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3001011〉

서울신문은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 이 소식을 전하면서 본문 기사 위에 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의 사진을 1면에 나란히 게재했다.

편집자는 두 사람의 사진을 다루면서 정 의원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울먹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박 시장은 시선을 살짝 옆으로 둔 채 미소 짓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 설명은『새누리당 정몽준(왼쪽) 의원이 12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는 도중 막내 아들의 '국민이 미개인' 막말 논란을 언급하다가 울먹이며 눈물을 닦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확정된 박원순(오른쪽) 시장이 이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아들 문제로 울먹인 것이라는 것이고, 박 시장에 대해서는 왜 미소 짓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특히 편집자는「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별개의 기사 본문을 이 사진들과 대칭되도록 배치하고 그 제목을 해당 기사 공간을 넘어 거의 통단 제목으로 키우면서 두 사람의 사진 위에까지 이르도록 했다. 그리고 정작 이 사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목을 뽑지 않고 기사 본문에 대한 제목을 사진 밑에 배치했다.

결과적으로 이 1면을 처음 본 독자들은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 속에서 정 의원은 울고 있고, 박 시장은 웃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두 후보 중 한 사람은 울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웃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것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편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세월호 정국'임을 감안할 때, 특히 사진 위에「'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제목이 마치 그 사진의 관련 제목인 것처럼 배치한 편집은 독자로 하여금 울고 있는 정 의원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신문의 1면 편집은 편집부의 시니어 기자가 담당하고, 편집부의 데스크들은 물론 편집국의 담당 부국장, 국장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면 편집은 편집자의 능력이나 판단의 부족에 따른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편집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마련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불공정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독자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편집지침」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5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4년 1월 24일자 A8면「◆ 6·4선거 후보에 듣는다 ① 부산시장/서병수 새누리당 의원/朴대통령이 "나가셔야죠" 하더라」, 3월 25일 A5면「⑪ 부산시장/오거돈 前 해수부장관/무소속 완주…당선돼도 입당 안해」, 1월 29일자 A6면「◆ 6·4선거 후보에 듣는다 ② 경기도지사/김진표 민주당 의원/"아시안게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겠다"」, 3월 26일자 A4면「⑫ 경기도지사/김상곤 前교육감/"큰 돈 드는 철도보다 무상버스가 낫다"」, 3월 14일자 A6면「◆ 6·4선거 후보에 듣는다 ⑩ 인천시장 /유정복 前 안행부장관/13조 빚 관리할 부시장 두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①부산시장/서병수 새누리당 의원)=『6·4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자리가 부산시장이다. 여권에서는 묵직한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전직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여권 후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후보는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4선의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62·부산 해운대기장갑)이다.

그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취임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하니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죠'라고 말씀하셨다"며 사실상 청와대 내락을 받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다음달 4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 왜 부산시장인가.

▶국회의원은 3선이 꽃이다. 그 정도면 의정활동 에너지를 거의 소진한 것 아닌가. 그러고 나면 더 큰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맞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고 박근혜정부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내가 부산 발전의 적임자라 본다.

- 박 대통령과 상의는 했나.

▶4년 전 3선 때도 의논했는데 박 대통령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작년 대통령 취임식 며칠 후 "이제 제 할 일은 다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직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박 대통령은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말씀하셨다. (올 1월 7일 청와대 의원·당협위원장 초청 만찬에서 박 대통령은 서 의원에게 "부산에서 잘하고 계시지요"라고 물었다.)

- 이달 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온두라스에 가는데.

▶신임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간다. 대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사 적임자로 판단하신 것 아닐까 싶다. 24일 출국한다. (중략)

■He is…

△1952년생 △경남고 △서강대 경제학과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16~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501〉

(⑪부산시장/오거돈 前 해수부장관)=『부산시장 야권 무소속 후보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소속 시민 후보로 이번 선거를 완주하고 당선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등 기존 정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전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부산은 20여 년간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제가 침체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부산시장 세 번째 도전인데.

▶지난 20여 년간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유지되면서 부산의 역량을 살리지 못하고 경제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 정당이 아닌 인물을 뽑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중략)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이 '친박(친박근혜)'이라 박 대통령께 말해서 가져오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대구·경북에는 서 의원보다 더 실세들이 많다. 저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의 힘을 결집해 문제를 풀 것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해양수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 조건이다.

■He is…

△1948년 부산 출생 △경남고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행정학·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석사 △동아대 행정학 박사 △행시 14회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대 총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59692〉

(②경기도지사/김진표 민주당 의원)=『"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을 위한 정책에 야당도 협력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빠진 경기도를 구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정)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우(右) 클릭' 전략에 '수권정당'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를 놓고 '안철수 신당'과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가 되려는 이유는.

▶경기도는 현재 1인당 지역내총산(GRDP)이 6개 광역권 중에 최하위(2011년 기준 2062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경기도를 구할 '경제 전문 도지사'인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경제·재정·복지가 강한 3강 경기도를 만들겠다. (중략)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해 보수적인 '관료' 이미지가 강한데.

▶금융실명제 등 역대 정부에서 가장 개혁적인 조치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부처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정치권에 진출한 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선출직을 역임했다. 개혁적인 야당에서 관료 출신이 선출직에 도전해 당선됐다는 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He is…

△1947년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13회 △김대중 정부 정책기획수석·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9053〉

(⑫경기도지사/김상곤 前교육감)=『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전철망이 미흡하고 승용차 의존이 높은 곳이 경기도"라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무상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

합 예비 후보로 나선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무상버스 공약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선 경쟁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강조하는 철도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라며 "시급한 것은 버스 문제"라고 말했다.

- 무상버스 공약이 논란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분야가 교통이다. 서울은 지하철이 잘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다. 서울의 전철·지하철, 버스, 승용차 수송 부담률은 각각 40%, 28%, 24% 수준이다. 경기도는 각각 9%, 30%, 48% 수준이다. 승용차를 서울의 2배 정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무상버스는 승용차 이용을 줄여 버스 통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재원 문제가 있을 텐데.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해 대상을 장애인, 평일 초·중학생, 평일 고교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 문제는 시·군과 협의해 분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에서 책임질 부분을 책임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소요 예산은 첫해 956억원, 2016년 1725억원, 2017년 2686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 버스공영제 문제도 논란이다.

▶김진표 의원은 민간이 소유하고 노선 조정권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준공영제를 주장하지만 이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진전 기미가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갖는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설 노선, 적자 노선부터 공영제로 전환해 민영과 경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략)

■He is…

△1949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서울대 경영학 박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공공부문 연구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초대·2대 주민 직선 경기도 교육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66289〉

(⑩ 인천시장 /유정복 前 안행부장관)=『최근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58·3선 김포시)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부채 문제를 전담할 부시장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2010년 9조4550억원에서 현재 약 13조원으로 부채가 늘면서 빚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성과를 내면서도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예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포가 지역구인데 왜 인천시장에 나섰나.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반대 측에서 지역구가 김포라는 점을 지적하지만 시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올해 2월 들어 희생적 결단을 해서라도 박근혜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당에서 출마를 요청했다는데.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당에서)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장관직까지 던진 것을 두고 너무 많이 버린 것 아니냐고 묻지만,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 (중략)

- 정치인 유정복으로서 장점은.

▶나는 두 번이나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다. 하지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첫 장관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 또 시가 발전을 하려면 정부 힘이 필요한데, 유정복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있겠는가.

■He is…

△1957년 인천 출생 △송림초 선인중 제물포고 △연세대 정치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23회 행시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초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17~19대 국회의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9684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들은 '6·4 지방선거'를 채비하는 예비후보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는 연속 기획물이다. 위 기획 시리즈는 「6·4선거 후보에 듣는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지난 1월 24일자부터 게재하기 시작해 4월 7일자까지 모두 13명의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를 소개했다.

위 기사들은 부산시장선거의 새누리당 서병수와 무소속 오거돈, 경기지사 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와 김상곤, 인천시장선거의 새누리당 유정복 예비후보를 각각 다룬 것이다. 기사는 이들 예비후보의 말을 인용해 이들의 치적과 공약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위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를 소개하지 않았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 위 시리즈는 새누리당 후보경선이 실시된 4월 30일까지 서병수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권철현, 박민식 예비후보는 다루지 않았다. 반면 서병수는 위 시리즈 첫 번째 인물로 소개했다. 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5월 16일까지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위 시리즈로 소개했으나, 그와 경쟁관계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 위 시리즈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경선이 실시된 5월 11일까지 원혜영 예비후보에 대해선 해당 기획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반면 그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김진표와 김상곤 예비후보는 각각 시리즈 두 번째와 열두 번째로 다뤘다.

매일경제는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경선이 실시된 5월 9일까지 유정복 후보는 인터뷰하면서 그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안상수 예비후보는 소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시리즈는 경쟁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기사인데도 상대후보에게 최소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문〉

경북도민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면 「"'프로펠라' 확 잡아 돌려야 합니다." /김관용 후보, 구수한 입담 연일 화제…"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관용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의 구수한 입담이 연일 화제다.

지난 22일부터 지역별 순회 유세에 들어간 김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면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저 양반이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할까'. 지역과 관련된 정책 못지않게 기다려지는 것은 재미있는 그의 말.

"군민들이 똘똘 뭉쳐 일하고, 그 힘으로 프로펠라 확~ 잡아 돌려야 합니다"라든가, "박수 많이 치니 고맙네. …시껍했다" 라는 적절하게 비유를 내포한 말에 유세장은 웃음 도가니로 빠진다. 결기에 차 고함치는 보통 유세장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까 싶다.

김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경상도 사나이. 지역민에 익숙한 사투리와 함께 적절하게 섞어 넣는 유머, 근엄한 도지사가 아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고, 삼촌 같은 모습에 청중들 사이 웃음꽃이 피고, 박수가 절로 터진다.

그렇다고 우스개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대한민국에서 단

체장을 6번째 도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도 "도민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대단하가를 느꼈다"며 "도민은 하늘이고, 도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됐다"고 도민들에 진솔한 마음을 전한다. 또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솔직하게 속내를 보이기도 한다.

김관용 도지사 후보는 25일 봉화, 영주 등 도내 북부지역 유세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한 달에 한번은 부모님을 찾아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손자·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김 후보는 "요즘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자식들이 너무 바쁘다보니, 어르신들이 추석이나 생일, 어버이날 등 이름 붙은 날이라야 겨우 손자·손녀의 얼굴 한 번 볼 수 있다"며 "'할매! 할배! 엄마 아빠랑 내일 뵈러 가겠습니다'라는 꿈같은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 들어서 사는 재미 중 가장 큰 재미는 손자·손녀를 만나는 것"이라며 "먹고 싶은 것 안먹고, 쓰고 싶은 것 안쓰고 아껴 둔 용돈을 꺼내 줄때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큰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 하더라"며 할매·할배의 날 지정 취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하지만 날이 정해져도 바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지 않으면 지정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도청 직원 등 공무원들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도내 각 기업체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자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입장할 때 기업들이 사회적 기부형식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도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용 후보는 주말 첫날인 24일 고령과 성주를 방문해 "농업경쟁력을 배로 끌어올리고 산지부농의 꿈을 살현시켜 억대농가 1만가구를 달성하겠다"며 "FTA에 대응해 농어촌과 산촌을 살찌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8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의 『구수한 입담이 연일 화제』라는 주관적 평가를 앞세워 선거용 메시지에다 가로 3단 크기의 큼지막한 칼라 사진을 곁들여 김 후보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기사는 『지역과 관련된 정책 못지 않게 기다려지는 것은 재미 있는 그의 말』, 『적절하게 비유를 섞은 그의 말에 유세장은 웃음 도가니로 빠진다』, 『근엄한 도지사가 아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고, 삼촌 같은 모습에 청중들 사이 웃음꽃이 피고, 박수가 절로 터진다』 등 김 후보의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감성적인 표현 및 문구와 더불어 김 후보의 중점 공약을 소개하는 등 선거용 홍보물을 방불케 했다.

기사 큰 제목도 「"'프로펠라' 확 잡아 돌려야 합니다."」라고 호소력 있는 우스갯말로 달았다.

이에 비해 경쟁 상대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는 대각선 아래쪽에 배치한 가로 2단짜리 기사를 통해 경북의 북부권을 돌며 유세를 했다는 소식을 1단 짜리 사진과 더불어 스트레이트성 뉴스로 처리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이들 외에도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와 정의당 박창호 후보도 출마했지만 경북도민일보는 이들의 선거 관련 소식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형식과 내용을 가릴 것 없이 후보별로 뚜렷하게 차별을 둔 이 같은 지면은 공정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7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4년 5월 28일자 11면 「서울시장 선거 度 넘은 네거티브/故人까지 욕보이려 하는 野」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네거티브 공방 논란이 일고 있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병마와 싸우다 사망한 후보자의 모친까지 거명되는 등 유력 후보 캠프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영일 부대변인이 27일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어머니는 어디 계셨나'라는 논평을 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이 이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 후보 측에서 최근 박 후보 부인의 잠적설 및 부채·세금체납 의혹 등을 제기한데 대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후보의 모친인 고 변중석 여사는 대선 당시 와병 중이었다. 정 후보 캠프는 28일 강력 성토에 나섰다. 캠프 이수희 대변인은 "1992년 대선 당시 변중석 여사는 와병 중이었다. 1990년 말부터 입원했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는데 새삼스럽게 고인까지 거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변 여사는 아들들의 연이은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병을 얻은 뒤 10여 년간 병마와 싸워오다 2007년 별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확한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 개인의 아픈 과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 후보가 박 후보의 이념 문제를 거론하는데 대한 반격으로 박 후보 측이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발언은 국가관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종북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 후보 부친인 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기업가마저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정 후보 측은 이날 "박 후보의 아들(주신 씨)이 지난 3월 공익근무를 마친 뒤 해외 유학을 떠나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딸은 스위스에 아들은 미국에 보낸 박 후보는 진정한 서민 후보인가"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2801071123080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6·4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전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가 소개한 네거티브 사례는 박원순 후보 측이 낸 2건의 '논평'뿐이다.

박 후보 측은 정몽준 후보 측의 '박 후보 부인 잠적설' 의혹 제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후보의 어머니는 어디 계셨나'라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은 "선거기간 변중석 여사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한 내조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식석상에 나오신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사는 『병마와 싸우다 사망한 후보자의 모친까지 거명되는 등 유력 후보 캠프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정 후보의 모친인 고 변중석 여사는 대선 당시 와병 중이었다』, 『"정확한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 개인의 아픈 과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기술했다.

박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의 잇따른 색깔론 제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은 "정 명예회장의 호칭은 의례적인 인사말로 국가보안법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정몽준 후보 '논리'대로라면 그 발언은 '국가관'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종북'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은유와 상징, 비유적 표현'을 색깔론의 소재로 활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사는 『'악의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기업가마저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의 주체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서울시장 선거 度 넘은 네거티브/故人까지 욕보이려 하는 野」로 큰 제목을 달았다. 또 작은 제목을 「故정주영·변중석여사 공격」, 「팩트도 확인안해…"악의적"」으로 다는 등 정 후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부호도 없이 거의 단정적으로 옮겼다.

위 기사는 보다 엄격하게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거기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와 제목은 특정 후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 양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2014-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4년 8월 18일자 18면 「끔찍한 허리 고통 해방 … 이젠 바로 잘 수 있어요/원리침 문화 보급 캠페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를 내보내면서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척추·관절 환자들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아프다. 허리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목·무릎·고관절 등도 좋을 리 없다. 목이 아프면 어깨나 팔을 올리기 어렵거나 편두통에 시달린다. 허리가 굽으면 자세가 비뚤어지거나 몸을 움직이는 특정한 동작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전혀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겪고 있는데 특정 부위의 통증이 더 커서 다른 부위의 통증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경우도 있다.

침 끝에 칼이 달린 개념의 침도에서 침 끝을 둥글게 변화시켜 안전성을 높인 원리침은 척추·관절의 특정 부위를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비수술적 요법을 찾는 환자라면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다. 원리침의 전 방위적인 치료로 고질적인 척추·관절 통증에서 벗어난 환자 세 명을 만났다.』

〈http://isplus.joins.com/article/253/15560253.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원리침 문화 보급 캠페인'이라며 위 전문 기사와 환자 3명의 사례를 1개면에 걸쳐 보도했다.

기사는 전문 아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고관절 통증 등을 각각 '원리침'으로 치료해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는 사례 3건과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이들 사례와 관련이 있을 법한 특정 인물의 도움말로 '전문가 Q&A'까지 소개하고 있다. '전문가 Q&A' 끝에는 '도움말 : 이건목 대한한의침도학회장·세계침도학회장'이라고 적어놓았으며 이 원장은 바로 원리침을 시술하는 사람이다.

기사 전문과 3건의 사례는 '원리침'이라는 특정 시술방법을 통해 통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장점 위주의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할 뿐 이 시술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특정 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7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4년 8월 26일자「발렌티노」, 9월 1일자「GUCCI」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朝鮮日報는 패션 브랜드인「발렌티노」와「GUCCI」를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각각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통해 이들 브랜드 제품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해당 광고를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기업을 위한 섹션으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4년 10월 14일자「척추·관절 비수술 치료」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중앙일보는「척추·관절 비수술 치료」를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 4개 면을 할애해 세바른병원의 척추 관련 시술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해당 광고를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병원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병원만을 위한 섹션으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08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9월 22일자 B5면(「포토&」)의 「LG유플러스만 있다면 그곳이 어뮤즈먼트 파크」, 9월 23일자 B5면(「포토&」)의 「자연해독제 클로렐라로 내 몸을 깨끗하게」, 9월 29일자 B5면(「포토&」)의 「깐깐한 녹즙, 건강을 마십니다」, 10월 1일자 B5면(「포토&」)의 「유방암 퇴치 앞장서는 GE헬스케어」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東亞日報는 「포토&」이라는 면 제목 아래 광고 없이 1개 면 전체를 할애해 'LG유플러스' '자연해독제 클로렐라' '풀무원 녹즙' 'GE헬스케어'을 홍보하는 기사를 사진을 곁들여 게재했다. 이들 기사는 특정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홍보하거나 기업의 캠페인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4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스포츠동아 2014년 11월 13일자 15면 「동안 피부전문가의 트러블 없는 피부관리 노하우|초이스피부과 최광호 원장/유행 따라 해본 문신, 피코슈어레이저로 해결」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스포츠동아의 위 칼럼은 피부과병원 원장인 전문의의 기고 형식으로 게재한 것으로, 문신을 제거하는 데 피코슈어레이저 시술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다.

스포츠동아는 8월 12일자 14면 「문신제거? '피코슈어레이저'로 고민 해결!」 제목의 칼럼 이후 24회에 걸쳐 12명의 필진(피부과 전문의)이 각각 1~3회씩 돌아가며 쓴 같은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24회의 칼럼은 모두 피코슈어레이저 시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목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처럼 특정 병원 관계자들이 쓴 같은 주제와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또한 스포츠동아는 칼럼을 기고한 의사의 이름과 소속 병원명을 제목에 넣는 것은 물론, 원장의 사진과 경력까지 지면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병원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지면제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사실상 의료광고와 다를 바 없으며, 의료광고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하겠다.

특정 병원과 인물을 광고와 다름없이 홍보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는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sports.donga.com/3/all/20141113/67869118/1〉

▲ 2014-1375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11월 20일자 「Cavalia」 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東亞日報는 아트 서커스인 「Cavalia」를 위한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Cavalia」 공연 정보를 알리고, 공연 내용을 홍보했다. "지상 최대의 아트 서커스" "카발리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 등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공연업체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공연만을 위한 섹션으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6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스포츠동아 2015년 2월 4일자 15면 「메스방식 질 성형수술, 늘어난 질 점막 효과적 개선」, 2월 6·7일자 14면 「흉터걱정은 이제 그만! 메스방식 소음순 수술」, 2월 11일자 19면 「출산 후 늘어난 질 점막, '메스방식 여성성형'으로 해결」, 2월 13·14일자 15면 「질염, '메스방식 여성성형'으로 개선」, 2월 18일자

13면 「'메스방식 여성성형술'로 여성건강 관리하자」, 2월 25일자 15면 「요실금 환자, '메스방식 여성성형'으로 해결」, 2월 27·28일자 15면 「갱년기 여성의 고민, 메스방식 여성성형으로 해결」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스포츠동아의 위 칼럼들은 산부인과병원 원장인 한 전문의의 기고문으로, 필자가 소속된 병원에서 시술하는 '질 성형수술'과 '소음순 수술'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스포츠동아는 2월 한 달간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칼럼들을 모두 7회에 걸쳐 게재했다. 칼럼 필자는 '연세미산부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이진우 원장'과 '이뻐지는산부인과 전문의 이진우 원장' 두 가지 명칭으로 표기돼 있으나 두 병원은 같은 병원이며 필자도 동일인이다.

이처럼 특정 병원 관계자가 쓴 같은 주제와 내용의 칼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스포츠동아는 또 위 칼럼들을 통해 필자가 소속된 병원의 진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병원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5월 7일자 15면 「3년째 '한지붕 두가족' 하나금융…해외서

부터 시너지 효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그러나 합병 3년차를 맞은 현재 하나·외환은행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전망은 우려보다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외환은행 내부의 반(反) 하나금융 정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략)

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시너지 효과는 해외 시장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환 분야에 강점을 가진 외환은행과 통합하면서 하나금융은 국내 은행권 최대 규모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2025년까지 해외 부문의 이익을 9배 늘리고 그룹 내 비중을 4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외 시장 진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하나금융의 이런 자신감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중략)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해외법인 및 점포 통합작업은 단순히 해외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에 설립한 은행 현지법인과 하나금융 내 다른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해 5월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나대투증권에 연계 영업을 제안했다. 각 기업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결과 회사채 총 11억 위안(약 1812억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외환은행 중국법인도 하나대투증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근 중국 현지에서 큰 수확을 얻었다. 기관투자가 자금을 모집해 거액의 비거주자(NRA) 정기예금을 신규 유치한 것이다. (중략)

이미 지난 3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통합 법인인 'PT Bank KEB Hana'가 공식 출범했다. 하나금융 내 두 은행의 실질적인 첫 통합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통합 인도네시아 법인은 총자산 14조 6000억 루피아(약 1조 2590억원), 자기자본 2조 7000억 루피아(약 2350억원) 규모로 시작했다. 하나금융은 인도네시아 법인을 향후 10년 내 총자산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20위권 은행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하나·외환은행의 시너지 효과는 국내에서도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략)

하나·외환은행의 고객이 상대 은행의 ATM을 이용한 건수는 2012년 114만 4821건에서 지난해 509만 273건으로 4.4배가 늘었다. (중략)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인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의 카드 부문에서도 양사의 네트워크를 공통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중략)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넘어선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 부문의 통합은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중략) 하나금융 관계자는 "카드 부문의 합병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시너지를 높이는 일"이라며 "본격적인 시너지 확보를 위해 원활한 합병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07015012〉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합병 3년차를 맞은 하나·외환은행의 시너지 효과가 해외시장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해외법인 및 점포 통합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또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하나·외환은행의 시너지 효과는 국내에서도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 부문 등에서 새로운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3년째 '한지붕 두가족' 하나금융…해외서부터 시너지 효과」라고 통단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작은 제목도 '최대 규모 해외 네트워크 보유' '亞 고객군으로 영업확대' '고객 편리하게' '새 수익창출 기대' 등 장점 일색으로 달았다. 또 하나금융이 제공한 홍보사진과 김정태 회장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그런데 위 기사가 보도되기 1주일 전을 전후해 하나금융그룹은 여러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 1/4분기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33.1% 급감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경에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조치해 총 59억여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혔다는 점을 들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그룹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등의 여파로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악재가 연거푸 겹쳐 곤혹스런 입장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악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경제면의 톱뉴스로 다루면서 지면의 절반가량을 할애하고, 통단 제목을 다는 등의 편집을 한 점도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검증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금융그룹이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면서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7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4월 25일자「CAR」별지 섹션, 스포츠경향 5월 13일자 10~11면「CAR & LIFE」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東亞日報, 스포츠경향은 자동차를 주제로 별지 섹션 혹은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대부분의 지면에 특정 자동차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지면에 소개된 일부 기업의 광고도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0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4년 5월 17일자 A23면(「Weekend Luxury & Style」)의「'세라믹 시계' 이끈 RADO」·「터치로 시간 맞추는 신기술 시계 탕웨이도 반했다」·「마티아스 브레스찬 CEO "라도가 이끈 소재 혁신 다른 브랜드도 따라와"」, 5월 24일자 A22면(「Weekend Luxury & Taste」)의「방배동 해산물 프렌치 레스토랑 '앙

티브'/나만의 코스요리로 지중해의 풍요를 품다」·「디자이너 지망생 출신 조성범 셰프/"'프렌치 레스토랑=육류'라는 틀 깨고 싶었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경제는 주말 섹션 「Weekend」를 제작하면서 광고 없이 1개 면 전체를 할애해 특정 시계와 특정 음식점을 소개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라도(RADO)를 소개한 기사는 시계를 찬 모델 탕웨이 사진을 싣고, 장점 위주로 해당 제품을 홍보했다. 취재기자가 상하이까지 가서 이 회사 CEO를 인터뷰하고 제품의 중국출시 행사 현장을 취재해 전했다.

레스토랑 '앙티브'를 소개한 기사는 장점 일변도로 매장을 홍보하고, 광어구이 등 메뉴 사진을 컬러로 실었다. 또 매장 대표 셰프를 인터뷰했고 매장 위치와 가격,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안내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2.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중앙일보 2014년 7월 21일자 「동국대학교」, 7월 22일자 「앞서 가는 대학」, 7월 28일자 「내일을 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월 4일자 「글로벌 리딩대학(성균관대학교)」, 8월 6일자 「엘리트 산실 한양대」, 8월 11일자 「글로벌 전북대」

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1일자 「가천대학교」, 7월 28일자 「작지만 강한 서울여자대학교」, 8월 5일자 「한양대학교」, 8월 11일자 「경희대학교」 별지 섹션, 東亞日報 7월 29일자 「동국대학교 인문학과 과학의 통섭」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대학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대학의 광고를 게재했다. 장점 위주로 대학을 알리고, 광고 문구처럼 제목을 뽑았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 대학을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대학만을 위한 섹션으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09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4년 10월 1일자 2면 「삼성운용 사장이 CEO 〈계열사〉에 보낸 '재테크 편지'…"제 추천펀드는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약 3년 정도 투자하시면 꼭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말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윤용암 사장이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친분 있는 부사장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이다. 여러 자리에서 '요즘 같은 때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다보니 '레터' 형식으로 답을 대신한 것이다.

윤 사장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왔다. 실제로도 지난 7월에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삼성밸류플러스 펀드'에 직접 가입해 자산을 굴리고 있다. 재테크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앞서 7월에 보낸 첫번째 편지를 통해 '삼성밸류플러스 펀드'와 '삼성중소형FOCUS 펀드'를 추천했다. 연이어 8월말에 띄운 두번째 편지에선 아직 투자를 못했거나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펀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담당 펀드매니저에 대한 소개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밸류플러스 펀드'는 회사의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기존 가치투자에 'M&A 가치주' 투자를 더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 펀드는 설정 후 7.23%의 높은 수익을 내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1.22%을 6.01%포인트 웃돌았다. 펀드가 높은 성과를 달성하자 출시이후 석달만에 700억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

윤 사장은 편지에서 밸류주식운용본부의 한성근 매니저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대 MBA를 졸업하고 한국과 미국 회계사로서 딜로이트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5년간 담당해 이 펀드 운용의 적임자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밸류주식운용본부를 이끌고 있는 민수아 본부장과 함께 지난 5년간 업계 최고 가치주 펀드로 손꼽히는 삼성중소형FOUCS펀드 운용을 위해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구축 업무를 도맡아 수익률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중소형FOCUS 펀드에 대해선 "설정이후 지난 6년간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은 펀드"라며 "민 본부장은 가치투자 최고의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다. 이 펀드는 5년 수익률 123.17%, 3년 수익률 54.56%를 달성하고 있다.

윤 사장은 아울러 "삼성밸류플러스 펀드와 삼성중소형FOCUS 펀드는 장기투자에 매우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삼성증권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윤 사장은 올해 초 각 본부별 비전제시를 통해 주식운용본부와 리서치센터에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당부한 바 있다. 부진을 딛고 힘을 회복해 다시 도전한다는 뜻이다. 윤 사장은 3년내에 삼성자산운용의 액티브 주식형 펀드를 시장점유율 1위로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300819541334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사장이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친분 있는 부사장들에게 보낸 '재테크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편지에서 윤 사장은 삼성자산운용의 펀드상품인 '삼성밸류플러스펀드'와 '삼성중소형FOCUS 펀드'를 재테크상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또 담당펀드매니저인 한성근 매니저와 민수아 본부장의 경력과 실적 등을 상세히 전하며 최고의 적임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위 편지는 특정회사 대표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머니투데이가 위 내용을 2면 통단 탑 기사로 보도한 것은 기사의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삼성자산운용사장과 해당 펀드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4년 1)4월 16일자 「롯데건설, 송도서 초고층 오피스텔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분양」, 2)4월 5일자 「포스코A&C 층고3.9m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분양」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롯데건설, 송도서 초고층 오피스텔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분양

롯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5·7공구 M1블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한 복합단지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은 송도에 들어서 있는 기존 중소규모 오피스텔과 다르게 47층의 초고층으로 건설되며, 2개동, 총 1835실의 대규모 단지로 전용면적 기준 26·34m^2 (구 8~10평형대)의 소형으로 공급된다.

평면구성은 오피스텔의 공간활용과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인테리어와 평면설계로 차별화시켰다. 실내 한쪽 벽면은 풀 퍼니처 시스템으로 붙박이 시공해 수납공간을 늘려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세탁실을 욕실에 설치해 소음을 낮췄으며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침실과 거실 분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오피스텔 내에 업무와 휴식, 건강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 라운지를 조성, 라운지에는 간편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합기,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오피스 지역과 코인세탁실 등을 완비, 손님맞이용 응접공간인 게스트라운지 등도 설치된다. 또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 및 독서실과 건강관리를 위한 휘트니스 센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환경은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GTX 노선이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19년 개통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잇는 48.7km GTX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임대수요층으로는 송도의 신흥 중심지역으로 IT융·복합단지, 테크노파크 등과 포스코와 삼성, 대한항공, 롯데 등 대기업 이전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워터에너지의 본사가 인천테크노파크 IT센터로 입주했으며 작년 유엔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가 들어섰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약 1천500명 규모의 인력이 송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송도국제신도시 5·7공구에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개교로 학생, 교직원 수요가 크게 늘어나 배후수요가 풍부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5·7공구는 전용면적 34㎡ 미만의 오피스텔이 희소성까지 부각되고 있어 이를 겨냥한 특화 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으로 수납공간 등 최적화된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68-2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6년 3월 예정이다.분양문의: 1661-8435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416000903〉

2)=『포스코 A&C 층고 3.9m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분양

포스코 A&C가 시공하는 '힘멜하임'은 영등포 뉴타운(2016년 예정), 양평동 11- 12-13구역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양평동 11구역과 13구역은 삼성물산, 12구역은 GS건설로 시공사가 확정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개통예

정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수서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4.8km 구간으로 동남부구간(금천구 독산동 ~ 강남구 수서동)이 2016년 1단계 개통시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라 투자자들의 기대치로 1차와 2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현재 회사보유분 잔여세대를 선임대 완료 하여 마지막 분양중 이다.

'힘멜하임'오피스텔은 공급면적 44.5㎡의 소형 오피스텔 투자가치와 오피스텔의 희소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높은(3.9m) 층고로 지어져 공간의 활용도와 개방감이 뛰어난 소형 오피스텔이다.

특히 아래 층은 거실 또는 사무실 등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사용 용도에 따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을 올려 둘 수도 있고,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및 2호선 문래역 이용이 가능하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안양천 체육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이대목동병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등 각종 생활 편의 시설도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힘멜하임' 오피스텔 1층에는 영등포구 1호 지정 주민행복카페의 입점이 확정되었으며 옥상정원, 주민회의실, 무인택배, 100%자주식 주차시설 등 생활편의가 완비되어 있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시스템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풀옵션을 제공한다.

KBS, MBC, SBS, 방송타운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GS홈쇼핑, LG전자 등 두터운 임대수요로 투자가 용이하다. 중도금 50% 무이자 융자(우리은행)이며 전매도 가능하며, 임대 확정된 회사보유분 역시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1899-4913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2800088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자사 홈페이지의 재테크면에 「롯데건설, 송도서 초고층 오피스텔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분양」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헤럴드경제는 이 외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들어 매달 두세차례씩 송고하였다. 실제로 헤럴드경제 사이트에서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란 검색어를 넣으면 제목과 내용이 다소 다를 뿐 비슷한 10건 이상 볼 수 있다.

또 「포스코A&C 층고3.9m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분양」 제목기사를 비롯해 스코A&C가 시공하는 '힘멜하임' 오피스텔 분양 기사도 올들어 7차례 게재했다. 더욱이 위 기사는 「실투자금 5,000만원대, 2년 1,800만원지급」 등 본문에도 없는 내용의 제목을 붙여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1월 9일자 「미혼·노년을 막론하고 자신감을 찾아 주는 소음순 수술」 제목 외 21건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기사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노년을 막론하고 자신감을 찾아 주는 소음순 수술

조선닷컴 단미 danmee.chosun.com

여자의 소음순은 그 모양이 마치 꽃잎을 닮아, '여성의 꽃'으로 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소음순으로 인해 불편함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소음순이 늘어난 경우와 양쪽 소음순 크기의 비대칭, 그리고 검게 변색하는 경우 등으로 인한 것이다.

먼저, 늘어난 소음순의 불편함은 일상생활에서 맵시 있는 옷매무새를 위해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또 운동할 때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늘어진 소음순간의 마찰은 접촉성 질염(헤르페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성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애액분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교할 경우 소음순이 질 안으로 함께 말려들어 가는 경우이다.

간혹 미혼여성들은 이 때문에 성 경험이 많은 여자로 오해를 받기에 십상이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질 안쪽이 보일 정도로 소음순이 크고 늘어져 있는가 하면, 양쪽 소음순 크기가 비대칭적인 사례, 사춘기부터의 잦은 자위행위로 인해 탄력이 없고 주름이 많아진 경우 등도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 병으로 인해 간병인이나 집안 식구와 같은 제3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할 때, 소음순 이상은 환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어 육체적인 병에 심적인 고통까지 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소음순을 미리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상에서는 불필요한 접촉과 꼭 끼는 옷 입기를 자제하고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소음순 이상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교정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불편과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신의 체형에 맞는 소음순으로 만드는 간단한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 소음순 수술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첫째, 수술 후의 모양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실밥 자국이나 수술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레이저 수술 전에 정확한 디자인을 함으로써 너무 많이 잘리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는 것과 수술부위가 출혈로 인해 딱딱해지는 증상을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술로 인해 생기는 부종과 통증을 최소화해, 수술에 동반할 수 있는 심한 통증과 부작용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소음순 수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은 이런 점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산부인과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을 제대로 하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라면 흉터나 봉합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흉터 제거술에 사용되는 미세성형 봉합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이 원하는 소음순 모양에 맞추어 섬세하게 고정함과 아울러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지 않는 특수연고를 바르도록 하고 있다.

또 소음순을 정확하게 디자인한 후 섬세한 손기술과 레이저로 한 번에 절개해 잘못 다듬어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낮으며, 수술부위 국소마취로 진행하므로 환자가 출혈이 없음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통증이나 부종과 관련해서도, 우리 몸과 같은 효소성분으로 이루어진 부종억제 주사를 사용해 세포 속의 부종 구성성분을 안전하게 분해함으로써, 부종 증상과 지속을 막고 회복속도를 빠르게 해 수술 직후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산부인과전문의 윤호주 의학박사. 아울러, 늘어진 소음순 조직이 음핵(클리토리스)을 덮고 있을 때 음핵노출술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수술 후에는 바로 자가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마취 크림으로 1~2일 통증 억제를 하고 나면 이후 통증은 거의 없게 된다. 치료기간은 2주 이내로 중간에 1~2회 사후 치료가 있다. 정상적인 성생활은 3주 후면 가능하다.

또한, '소음순수술-이쁜이수술'의 2가지 수술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상담여성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게 해 주기도 한다.

도움말 = 산부인과전문의 윤호주 의학박사』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0920.html〉

『이쁜이수술 방법, 후방질원개술로 요실금도…

조선닷컴 단미 danmee.chosun.com

요실금은 중년에 가까워지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불청객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이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몸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할 때 찾아오기도 하지만, 요실금은 주로 결혼 후 출산을 한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반 부분의 근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며 생기게 된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요실금 팬티 광고의 주요모델이 중년 이상의 여성인 것만 봐도 요실금 증상으로 고통받는 연령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결혼 후 지속적인 성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의 질 속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점차 이완되어 질이 헐거워짐과 동시에 탄력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방광과 질 직장 부분을 잡아주는 골반 근육 또한 약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요실금이 찾아오는 것이다. 방광을 닫히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 주는데 이 근육이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 기침 등 일상적인 행위에도 소변이 나오게 되는 복압성 요실금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줄면서 여성의 복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때 방광의 자리가 벗어나거나 요도 주변의 근육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요실금의 증상의 정도는 질 주변에 있는 근육의 약화 정도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물론 이쁜이수술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 요실금까지 치유가 가능한 이쁜이수술 법인 후방질원개술을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후방질원개술은 최근 8자근육강화술까지 보강하여 '이쁜이수술의 완결판'으로 알려졌기도 하다.

후방질원개술과 8자근육강화술은 기존 비전문의가 하는 각종 이쁜이수술로 생기는 부작용을 말끔히 해결하고, 전체 질 속 축소와 함께 질 속 근육을 복원해 준다.

후방질원개술은 질 쪽으로 이탈해 내려온 자궁을 원위치로 올려놓아 고정한 후, 질 속 깊은 곳인 자궁경부부터 질 입구까지 '정밀 박피술'로 봉합하며 질을 전체적으로 좁혀 나오는 것이다. 이 수술을 통해 좁혀진 질 속 면적만큼의 질

근막이 절개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봉합되어 하나로 조직화 된 채 두툼한 근육 형태로 질 속에 남게 됨으로써 질 속의 근육 강화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성교의 쾌감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요실금 증상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질 입구만 좁혀 놓는 임시방편적 수술보다 질과 항문부위의 회음부 괄약근을 개선하는 8자근육강화술은 질 입구의 근력과 탄력을 원천적으로 강화해 주어, 역시 요실금을 예방하면서도 남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제공한다. 이 8자근육강화술에도 질 점막을 박피하는 정밀기술이 사용되는데, 질 입구에서 3cm 속까지의 점막을 1mm 이하로 박피 한 후 8자 근육을 찾아서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 입구는 이전보다 작아져 원활한 성생활이 가능하고 변비, 요실금 방지, 질 수축력 강화는 물론 힙업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또 질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 길이가 더 길어짐으로써 미관과 위생에도 좋다.

도움말 = 산부인과전문의 윤호주 의학박사.』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31/2014123101246.html〉

『이쁜이수술 방법에 꼭 필요한 초정밀기술 '질점막박피술'

조선닷컴 단미 danmee.chosun.com

여성의 질 속을 이루고 있는 살의 조직은 무수히 많은 신경과 분비샘,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매우 복잡하면서도 각종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칫 소홀한 관리나 부주의로 인해 자극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세균과 각종 질환의 공격 대상이 된다.

여성의 질은 결혼 후 지속적인 성생활과 출산을 거듭한다. 자연히 근육 이완으로 질 속이 헐거워지며 수축력이 줄어 성감저하를 가져오는가 하면, 각종 분비물이 머물면서 질 속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넓어진 질 속으로 자궁이 내려오는 경우는 특히 심각한 질환으로서, 심하면 질 바깥으로까지 나오는 자궁탈출증으로 이어져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이쁜이수술은 어때야 할까.

당연히 이런 질 속 기능과 건강을 동시에 배려해야 하는 수술이어야 함에도, 비전문의사들이 질의 입구 부분만 좁혀 놓고 마는 수술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질 입구 부분은 성교 시 쾌감을 느끼는 신경 및 분비샘이 밀집한 곳인데도, 이를 절개한 후 봉합하는 수술로 인해 쾌감이 사라지는가 하면, 애액분비가 되지 않아 성교통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윤호주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는 8자근육강화술이 가미된 후방질원개수술은 지난 17년간 국내외를 막론, 독보적인 초정밀기술로 이루어 낸 '이쁜이수술의 완성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후방질원개수술은 내려온 자궁을 원위치로 올려 고정하고 자궁경부 부근의 질 속부터 좁혀 나오는 기술로, 이완되어 얇아진 질의 바닥을 넓게 박피한 뒤 접합함으로써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준다.

이때 적용되는 질점막박피술이 바로 핵심기술로서, 질벽의 조직을 1mm 이내로 벗겨내는 초정밀 기술이다. 이로 인해 질 속에 분포하는 신경과 분비샘 혈관의 손상을 막아 질의 성적 쾌감 기능을 처녀적과 같은 상태로 돌려줌은 물론 질과 자궁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다.

다음, 질과 항문부위의 회음부 괄약근을 개선하는 8자근육강화술은 질 입구의 근력과 탄력을 원천적으로 강화해 주어 남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제공한다.

이 역시 질 점막을 박피하는 정밀기술이 사용되는데, 질 입구에서 3cm 속까지의 점막을 1mm 이하로 박피 한 후 8자 근육을 찾아서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 입구는 이전보다 작아져 원활한 성생활이 가능하고 변비, 요실금 방지, 질 수축력 강화는 물론 힙업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또 질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 길이가 더 길어짐으로써 미관과 위생에도 좋다.

현재 이쁜이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여성이라면 우선 상담을 받기에 앞서 먼저 전문의가 맞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완전한 질점막박피술 능력 또한 갖추었는지 아닌지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움말 = 산부인과전문의 윤호주 의학박사』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3/2014122301239.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조선닷컴 라이프 난의 살림·육아·재테크를 다루는 〈단미〉 코너에 게재된 것이다. 「미혼·노년을 막론하고 자신감을 찾아 주는 소음순수술」을 비롯한 일련의 기사가 모두 소음순 수술, 또는 이쁜이수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모두 '도움말 = 산부인과전문의 윤호주 의학박사'로 돼 있다.

주 내용은 이쁜이 수술이 "변비, 요실금 방지, 질 수축력 강화는 물론 힙업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또 질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 길이가 더 길어짐으로써 미관과 위생에도 좋다"는 식으로 긍정일변도, 주관적 표현이다. 매주 한 차례 이상 비슷비슷한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보아 '산부인과전문의 윤호주 의학박사(○○○○ 산부인과의원)'를 홍보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크레디트를 '조선닷컴 단미 danmee.chosun.com'로 달았지만, 이는 외형상 기사형태를 갖추었을 뿐 사실상 이 병원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이다. 조선닷컴의 기사 검색에서 '윤호주'와 '이쁜이'를 치면 22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책임을 외면한 행위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아이닷컴 발행인 조 상 현

〈주문〉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 2015년 2월 9일자 「국내 유일 '특허' 에르온힐링액… 타 샴푸와 무슨 차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한국아이닷컴은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유일 '특허' 에르온힐링액…타 샴푸와 무슨 차이?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탈모 방지 및 양모 샴푸 자체로 특허를 받은 제품 에르온힐링액이 탈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샴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특허' 부분. 기존에 수많은 탈모방지, 양모 샴푸들은 기능이 아닌 샴푸 안에 넣는 추출물을 달리하는 제조방법 특허를 내세워 광고했다.

하지만 에르온힐링액 샴푸는 추출물이 아닌 탈모 방지 및 양모 촉진 기능 샴푸 자체가 특허다. 다시 말해 제조방법 특허는 그 추출물만 사용하면 어떤 샴푸

든 쉽게 특허 샴푸라고 될 수 있지만 에르온힐링액의 경우 완성품인 샴푸가 특허(특허 제 10-1127321호)이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 흉내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에르온힐링액은 '중소기업우수상품'(히트500)으로 선정되고, 미국 FDA 안정성 검사도 통과했다. 쑥, 갈근, 은행잎, 솔잎, 천궁 등 천연 추출물을 사용해 자극 없는 기능성 특허 한방 샴푸이기도 하다. 또 천연물질을 이용해 비듬과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두피 모공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모발이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샴푸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에는 샴푸 후 마른 두피에 가볍게 분사하는 제품인 에르온 헤어토닉액도 선보였다. 이 토닉액은 건조한 두피 케어는 물론 건강한 두피와 모발의 굵기 증가까지 효과가 있다.

한편 '이유있는 쇼핑몰' 이유샵(www.becauseshop.com)에서는 특허 샴푸 에르온힐링액과 토닉액을 각각 40% 할인된 금액에 한정수량 판매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502/e2015020910180294230.ht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아이닷컴은 2월 9일자에 「국내 유일 '특허' 에르온힐링액… 타 샴푸와 무슨 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보면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8일에도 「국내 유일 양모·탈모방지 특허 샴푸 눈길… 토닉도 출시」라는 제목으로 거의 내용이 같은 기사가 실리는 등 2014년 1월 15일부터 모두 17회나 게재하고 있다. 이는 여타 매체들이 한두차례 소개한 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기사내용도 추출물이 아니라 제조된 샴푸 자체에 특허를 낸 만큼 타 제품이 흉내 낼 수 없으며 탈모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는 등 제품 홍보가 중심이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수개월에 걸쳐 계속 내보내는 것은 특정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나 다름없는 내용을 기사로 위장해 장기간에 걸쳐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사회적 책임

▲ 2014-30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경향닷컴 발행인 송 영 승
2.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3.중앙일보 발행인 박 상 순
4.한국일보 발행인 조 상 현
5.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6.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경향닷컴(khan.co.kr) 2014년 4월 16일자 「승선자 사망 땐 1인당 3억5000만원 배상 공제에 가입」 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4월 16일자 「침몰 여객선, 77억 규모 보험 가입」 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4월 16일자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가입」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6일자 「인명피해 배상액은」 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6일자 「사망자 1인당 최대 4억5000만원」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6일자 「세월호, 113억 선박보험 가입… 사망보험금 최대 4억5000만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닷컴 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닷컴)=『「승선자 사망 땐 1인당 3억5000만원 배상 공제에 가입」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탑승객은 사망 시 최대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승객이 사망했을 때 1인당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 사망 시 최고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해치료비 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보상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돼야 지급된다. 현재 상당수 탑승객은 실종 상태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실종사건은 사고 후 1년 내에 사망 확인이 안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에 선적돼 있던 차량 150대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박은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해운조합이 36억원씩 인수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고 선박을 인양해 조사해봐야겠지만 전부 손실 사고로 판명이 나면 113억원이 전액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다만 77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뺀 나머지는 국내외 재보험사에 넘겨, 메리츠 측이 보상할 액수는 10억원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62154025&code=940202〉

(조선닷컴)=『「침몰 여객선, 77억 규모 보험 가입」 본문 생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6/2014041601663.html〉

(중앙일보)=『「진도해상 여객선 침몰…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가입」 본문 생략』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461691&cloc=olink|article|default〉

(한국일보)=『「인명피해 배상액은」 본문 생략』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4/h2014041621352221500.htm〉

(한경닷컴)=『「사망자 1인당 최대 4억5000만원」 본문 생략』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1662751〉

(헤럴드경제)=『「세월호, 113억 선박보험 가입…사망보험금 최대 4억5000만원」 본문 생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16001532&md=20140419004904_BK〉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4월 16일 사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와 가입 보험사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여행 중인 어린 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인명이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이들이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보도한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언론의 태도를 반영하는 선정적인 기사로, 실종자가 생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측면이 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 보도에서는 설령 사실 보도라 할지라도 보도 시점과 방식에서 신중하게 접근,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 기사는 재난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언론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2조 「취재준칙」 ②(재난 등 취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光州日報(kwangju.co.kr) 2014년 7월 7일자 「'지긋지긋' 호남 소외 … 힘 합쳐 극복해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긋지긋' 호남소외 … 힘합쳐 극복해야

[호남, 상생이 미래다] 〈1〉 광주·전남·전북 하나로

소모적 경쟁·갈등이 부른 정치·경제적 퇴보 이제 그만 미래비전 공유·역할 나누자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6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생'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광주와 전남·북 광역자치단체장은 상호 협력과 지원보다는 각자 경쟁과 갈등에 지역 역량을 쏟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 지역인사 소외, 정치·경제력 감퇴, 미래 비전 상실 등 갈수록 호남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호남 발전의 기반을 '상생'에서 찾자는 의미에서 '호남, 상생이 미래다'를 대 주제로 ▲하나의 호남 ▲지역기반 ▲지역산업 ▲지역인재 등 4개 소 주제를 정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분야별 담론을 엮어내고자 한다.

호남 소외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기반시설 불균형 속에 산업·문화·편의시설 등의 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규모에 의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면서 이러한 구도가 고착화 되고 있다.

중앙정부 내 호남 인맥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형평성'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호남에 기반을 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역색 극복'에 나서면서 주요 보직에서 호남 인물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초 지역 한 국회의원이 광주 거주 성인 남녀 1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남살리기 광주시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 가량은 '호남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3%가 호남이 위기이며, 38.2%가 '정권 차원의 차별과 소외'가 그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호남 위기의 원인을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지역주의(25.2%), 호남의 정치력 약화(19.4%), 위기 극복 동력 상실(9.7%) 순으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내 호남 인맥의 소멸이야말로 극단적인 '호남소외'를 상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출신 장관은 단 3명에 불과하며, 청와대는 물론 정부 주요 요직에서도 호남 인사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물론 과장급에서도 지역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직을 전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 정책과 함께 지역 내에서의 무관심 탓도 크다.

한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은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지역에서의 별다른 지원책도 없어 실력만으로 어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호남은 지역 인맥 관리가 부실한 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구 감소 추세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세종 12만9669명, 대전 153만5415명, 충남 205만6156명, 충북 157만5073명 등으로 충청의 인구는 529만631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호남은 광주 147만3697명, 전남 190만6487명, 전북 187만1333명 등으로 525만151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충청과 호남의 인구가 역전된 이후 1년 사이 그 간격이 4만4796명으로 벌어졌다. 1970년 호남의 인구는 565만2000명으로 전국의 20.4%를 차지, 당시 충청(440만1000명)보다 약125만명 앞섰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인구 통계는 곧바로 정부 정책 우선 순위, 예산 지원 규모, 국회의원 수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10대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20대는 대학 진학을 위해, 30대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핵심 구호로 내건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역소득은 언제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전국 시·도 평균 개인소득이 1447만원인데 비해 광주는 1405만원, 전남 1249만원, 전북 1315만원으로 모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이 1485만원, 충남 1340만원, 충북 1339만원으로 각각 앞섰다.

인구 감소, 정치·경제력 감퇴 등의 위기를 광주와 전남, 전북이 각각 대책을

수립해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 전남, 전북이 각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지원하며, 혜택을 분산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갈등과 대립을 접고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미래 비전을 함께 찾는 것이야말로 호남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당장 전북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광주와 전남이라도 새로운 통찰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상호 연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내·외의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등의 상생 협력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서둘러 의견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046588005280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호남 소외'를 다루고 있다. 기반시설 불균형 속에 산업·문화·편의시설 등의 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규모에 의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면서 이러한 구도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 내 호남 인맥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형평성'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호남에 기반을 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역색 극복'에 나서면서 주요 보직에서 호남 인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기사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선 6기를 맞아 광주·전남·전북이 힘을 합쳐 극복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긋지긋' 호남 소외 …」라는 표현은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불붙일 수 있는 표제라고 할 수 있다.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자체마다 제각각 지역을 챙기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론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 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5. 매일신문 발행인 여 창 환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1월 20일자「18세 딸 "순결 바친 아버지와 결혼 계획" 美 발칵」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19일자「친아빠와 '결혼' 계획…18세 소녀충격」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20일자「아빠와 성관계 맺은 딸, 결혼 계획 밝히며 한다는 얘기가… "헐!"」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19일자「'친아버지와 딸' 결혼 예정 "母가 동의해 주길…" 경악」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월 20일자「18세 소녀, 친아빠와 2년 넘게 성관계 '결혼' 예정!…"아이도 낳을 계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 서울신문,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18세 딸 "순결 바친 아버지와 결혼 계획" 美 발칵

막장 드라마 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 미국에서 18세 여성이 친 아버지와 결

혼 계획을 밝혀 많은 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대호 인근에 산다는 것 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 여성은 뉴욕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약 2년 가까이 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근친관계에 관대한 뉴저지 주로 이주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는 "아버지에게 순결을 바쳤으며 그가 다른 어떤 남자보다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데일리뉴스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딸의 부모는 고등학교 댄스파티 파트너로서 몇 주 동안 데이트를 하는 동안 아이를 가졌으나 이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아이가 5세 때 결별했다.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던 두 사람은 12년 뒤, 아버지가 딸의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재회했다. 딸이 17세 때였다.

생물학적 아버지와 딸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딸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처음 1주일간 아버지 여자 친구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렸다는 딸은 "그 감정이 잘못된 건지 아버지와 얘기한 후 입을 맞추고 관계를 했다. 첫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여자 친구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다만 아직 어머니는 부녀의 관계를 모른다고 한다.

부녀는 성인의 근친상간이 합법인 뉴저지로 이사할 계획이다. 또 아이에게 유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동아닷컴 기자 pis****@donga.com』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120/69179272/1〉

(서울신문)=『친아빠와 '결혼' 계획…18세 소녀 충격

소위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최근 미국의 한 18세 여성이 친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이들은 이미 육체적 관계까지 맺고 2년 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 현지매체인 뉴욕매거진의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8세 여성은 4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 헤어져 살았다. 그로부터 12년 후. 사실상 아빠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16세의 그녀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가 날라왔다.

바로 그녀의 아빠였다. 우여곡절 끝에 12년 만에 상봉한 부녀였지만 이들의 만남은 보통의 부녀와는 달랐다. 1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넘지말아야 선을 넘어버린 것.

여성은 "아빠와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면서 "우리 사이는 기본적으로 부녀 관계지만 친구이면서도 연인 사이"라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친 결혼에 관대한 뉴저지주로 이사가 '결혼'까지 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여성은 "뉴저지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해 아이를 낳을 계획" 이라면서 "근친 관계가 아이에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 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code=nownews&id=20150119601020&keyword〉

(스포츠동아)=『아빠와 성관계 맺은 딸, 결혼 계획 밝히며 한다는 얘기가… "헐!"

10대 소녀가 친아빠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를 낳을 계획까지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매거진은 18세 여성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8세 여성은 4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 헤어져 살게 됐다. 이후 12년이 지난 16세 때 아빠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재회했다.

그런데 아빠와 딸은 1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빠와 교제(?)하면서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 아이도 가질 계획을 밝히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뉴욕매거진에 따르면 이들은 뉴저지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는 뉴저지주가 근친 결혼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아빠의 다른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엄마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뉴욕매거진의 이같은 소식을 여러 외신이 전하면서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18세의 철없는 여성은 "아빠와 함께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는 평안함을 느낀다"면서 부녀 이전에 연인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큰 문제는 곧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18세의 여성이 엄마와 함께 자라 살고 있으며 곧 엄마에게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엄마가 원하면 아이를 낳고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네티즌들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부녀지간의 천륜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는 것이냐"면서 "아이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아빠가 바로 잡아줘야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나무랐다. 아울러 "아빠라는 사람을 딸로부터 격리 조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트러스트 http://www.facebook.com/DK-Bnews』

〈http://news.donga.com/DKBNEWS/3/all/20150120/69186782/1〉

(스포츠조선)=『'친아버지와 딸' 결혼 예정 "母가 동의해 주길…" 경악

10대 소녀가 친아버지와 결혼 계획을 고백해 미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욕매거진'은 친아버지와 사랑에 빠진 여성을 인터뷰했다.

익명의 이 여성(18)은 인터뷰에서 "친아버지와 2년 동안 사귀었고 성관계도 했다. 곧 그와 결혼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녀는 4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가 소녀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나게 됐다. 이 부녀는 몇 주 동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며 첫 만남에 성관계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부녀는 약혼과 더불어 아이까지 낳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여성은 "부모님은 18살 때 나를 임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두 분은 헤어졌고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버지 집에 약 5일 정도 머물러 있었다. 우리 둘은 키스를 나누고 곧 성관계를 맺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현재 이 부녀는 18세 이상이면 근친결혼이 허용되는 미국 뉴저지로 이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녀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다.

소녀는 "나와 친 아버지의 근친결혼이 친 어머니가 동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류가 시작 됐을 때부터 근친상간은 존재했다.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유전적으로 전혀 결함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미국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501200100219150013689&ServiceDate=20150119〉

(매일신문)=『18세 소녀, 친아빠와 2년 넘게 성관계 '결혼' 예정!…"아이도 낳을 계획!"

18세 소녀, 친아빠와 '결혼' 예정!…'충격' 아이도 낳을 계획!

친아빠와 결혼 계획을 벌이고 있는 18세 소녀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18세 여성이 친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현지매체인 뉴욕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8세

여성이 4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 헤어져 살았다.

그로부터 12년 후. 16세의 나이가 된 그녀에게 아빠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전해진 것.

우여곡절 끝에 12년 만에 상봉한 부녀는 1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이미 육체적 관계까지 맺고 2년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여성은 "아빠와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면서 "우리 사이는 기본적으로 부녀 관계지만 친구이면서도 연인 사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부녀는 상대적으로 근친결혼에 관대한 뉴저지주로 이사를 해 '결혼'까지 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여성은 "뉴저지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해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서 "근친관계가 아이에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빠와 딸의 결혼 정말 충격적이다!" "뉴저지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정말 대박사건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3 maeil01@msnet.co.kr』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873&yy=2015#axzz3PHc6vTnB〉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4세 무렵 친아버지와 헤어진 18세의 딸이 다시 만나 2년 동안 이나 성관계를 하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 미국 언론매체를 인용, 보도한 것이다.

이 여성은 합법적으로 결혼해 아이까지 낳을 계획이며 상봉 첫날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기사 내용 자체가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측면이 있다.

그렇잖아도 동성애나 근친상간 등의 기사가 여과 없이 보도되어 성윤리가 붕괴되고 가정의 가치가 크게 훼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건전하고 보편적 가치와 도덕성을 상실한 '부녀(父女) 간 부부 결합' 기사를 게재한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장 용 성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2월 2일자「침대에서 딴 남자 이름 부르는 아내」, 2014년 12월 1일자「스리섬·스와핑은 먼나라 얘기?…」, 2014년 10월 6일자「끝내주게 조여주는 또다른 구멍」, 2014년 11월 3일자「집창촌 진 자리에 오피방」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이 게재한 위 적시 칼럼은 다음과 같다.

성경원박사의 '성경(性敬)시대'

① 침대에서 딴 남자 이름 부르는 아내

여성의 성도덕이 바뀌고 있다. 잘난 여자들의 행복추구욕과 자기성취욕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연히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한다. 남편은 돈 벌어다 준다는 걸 무기로 아내의 자유와 본능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돼버렸다.

독일 작가 마르티나 렐린의 '나에게는 두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책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남편이 있거나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여성들이 자

신의 애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뚝뚝하고 배 나오고 머리카락 몇 오라기 안 남은 성적 매력 없는 남편만 대하던 중년 여성들이 매너 좋고 사근사근한 남성을 만나 마구잡이로 흔들린다.

다들 영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뽀얀 살결, 콜라병 같은 몸매의 여성과 다부진 근육,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성과의 질펀한 섹스를 꿈꿔보지만 배우자와의 잠자리라는 현실은 늘 배신을 하고야 만다.

아무리 별로여도 표시를 낼 수는 없는 일.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자의 신음소리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 차원의 피드백으로, 약간의 콧소리와 헐떡거림은 둘을 더할 나위 없이 들썩거리게 만든다. 그리고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미치겠어,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짜릿한 BGM(background music)은 없다. 여러 미사여구보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강하게 내뱉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참 좋겠는데, 의외로 무게 잡고 입을 앙다문 남자가 많다. 하나는 좋아 죽겠다고 끼약끼약 울부짖는데 다른 하나가 침묵은 금덩이라고 화답이 없다면 조금은 썰렁할 것이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사정하면서 한 번 '억!' 소리 지르는 것만큼 따분한 섹스도 없다.

격정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절정을 향해 치닫는 순간 휘황찬란한 애드리브가 최고기는 하지만 더티 토크가 튀어나와 황당할 때가 있다. 평소 숫기 없고 샌님 같은 남자가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다 섹스할 때 모두 표출하기 쉬운데,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반전의 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다 보면 그런 욕을 들으며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수도 있다.

마음에 없는 섹스를 하다 보니 하면서 잠시 딴생각을 할 수도 있다. 성관계에 너무 몰입하거나 애인과 배우자의 섹스 스타일이 비슷할 때 잠깐 헷갈릴 수 있다. 교성을 지르다 엉뚱한 남자 이름을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화들짝 놀라 더 큰 소리로 남편 이름을 불러보지만 이미 남편은 식어 빠져 널부러져 있다. 웃지 못할 해프닝 때문에 실제 목 졸라 죽임을 당한 여자도 있고, 얻어맞아서 눈탱이 밤탱이 돼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는 여자도 있다.

부부는 파뿌리 되도록 잘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꼭 지키면 참 좋겠지만, 어느새 또 다른 사랑이 와버렸을 수 있다. 혹시 샛길로 빠져 신의는 저버렸어도 상대가 모르는 채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특히 잠자리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예의라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 서울교대·경원대 행정학 박사/일러스트 : 김민지]

글 성경원 | 자료제공 매경이코노미

발행일 2015.02.02 | 기사입력 2015.02.02

〈http://mzine.mk.co.kr/v2/index.php?TM=M3&PM=M1&RC=2463〉

② 스리섬·스와핑은 먼나라 얘기?...

섹스는 남자와 여자, 둘이 은밀하게 하는 게 정석이지만 요즘은 포르노에서나 볼 수 있던 셋이서 하는 스리섬(threesome)이나 스와핑을 하고 싶어 난리들이다.

리세 마니케의 '고대 이집트인의 성애생활'이란 책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부부교환이나 그룹섹스 같은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인간의 윤리를 벗어난 방종으로 취급되는 요즘도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합의하에 낯선 사람과 함께 섹스를 즐기며 배우자를 나눠 갖는 사랑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더니 요즘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실제 조사 결과, 남편이 스와핑을 제안한다면 57%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지만 20%는 성적 자극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면 나쁘진 않다, 10%는 남편이 원하니 한 번쯤 고려해본다, 13%는 너무 반가운 일이라 환영한다고 한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그룹섹스를 해보고 싶다는 남성이 73%, 여성이 76%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잠자리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색다른 관계를 꿈꾸며 친구의 배우자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스와핑을 제안한다면 얼른 받아들일 것이다.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로 색다른 느낌, 화끈

한 쾌감을 맛볼 수 있다면 셋이 들러붙어서도 할 수 있다는 억압된 욕망이 혓바닥을 날름거린다.

두려움 반 기대 반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한번 맛(?) 들이면 헤어나지 못한다. 쉬쉬하면서도 포털 사이트에 초대형 스와핑 사이트가 넘쳐나고, 암암리에 트리플 섹스를 중개하는 카페들이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이유다. 문제는 스와핑 사이트들이 성인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뤄지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트리플 섹스, 셋이서 뜨거운 밤을 지낼 분을 찾습니다. 황홀한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저는 3S 경험이 많고, 매너 좋고 외모도 뛰어납니다'라고 꾀는 문구에 군침이 돈다. 스와핑 상대를 구할 때 기본 신상은 물론 사진 교환도 필수란다. 아무리 사랑 감정이 배제된 관계지만, 아무나는 싫다는 것이다. 원하는 섹스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교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고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섹스 스킬, 성적 취향과 선호하는 행위, 스와핑 경험까지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이 딱딱 맞기는 쉽지 않다. 어렵사리 파트너를 찾아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나면 이제 그들만의 비밀을 가진 동지(同志)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스와핑을 하자고 약속하고 나가서 아내가 갑자기 원하지 않아 혼자 나왔으니 트리플 섹스를 하자고 말하면 거절하는 커플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갈 데까지 간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불신이나 배신감, 수치심 등이 고개를 쳐들면서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기 쉽다.

여자 하나에 남자 하나, 일부일처제는 서로를 얽매어 놓고 나서야 안심한다. 재미있는 건 일대일 관계를 지겨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어가는 것에도 절절맨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지만 예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늘 그 타령이라 웬만해서는 흥분도 안 되고 별로 할 맛도 안 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배우자가 여럿이서 해보자고 하면 냉큼 응하게 될까?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 (www.sexeducation.co.kr) 서울교대·경원대 행정학 박사 / 일러스트 : 김민지]

글 성경원 | 자료제공 매경이코노미

발행일 2014.12.01 | 기사입력 2014.12.01
〈http://mzine.mk.co.kr/v2/index.php?TM=M3&PM=M1&RC=2371〉

③ 끝내주게 조여주는 또다른 구멍

남성들이 꿈꾸는 가장 질펀한 성적 환상은 '애널섹스(anal sex)'다. 애널섹스는 성기나 손가락, 섹스기구 등을 항문에 삽입하며 만족을 얻는 성행위를 말한다. 로마시대에 애널섹스는 피임 방법으로 이용했다.

이것저것 해볼 만한 섹스 테크닉을 다 써 봐도 심드렁하고, 아내의 질 근육이 느슨할 때에는 또 다른 구멍을 찾는 남자들이 있다. 요즘 세상에 처녀를 만나는 행운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고, 차진 명기(名器)를 가진 여성도 많지 않으나 항문 없는 여성은 없다. 게다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은 항문은 아직까지 많을 것이다. 질과는 조여주는 맛이 다른 쫄깃쫄깃한 괄약근의 맛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질을 통한 성교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포르노를 보고 호기심 때문에라도 꼭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자의 기꺼운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항문섹스는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포르노에서나 하는 줄만 알다가 남자가 해보자고 조른다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아프다. 찢어지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 사람들은 갑자기 손가락을 항문에 쑥 넣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과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섹스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대화와 애무로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조물주는 인간이 대변이 나오는 구멍으로도 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해놓지 않으셨다. 항문은 질처럼 윤활액이 펑펑 쏟아지게 훈련된 곳이 아니라서 러브젤로 부드럽게 항문을 넓힌 후 반드시 콘돔을 뒤집어쓰고 귀두 끝부터 살짝 인사를 해야 한다.

항문이나 직장 점막은 여성 질 부위 점막에 비해 훨씬 약해 항문성교를 했을 때 쉽게 상처를 입는다. 또 직장 깊숙이 들어가면 항문 괄약근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면서 내벽 세포들이 파괴되고 실핏줄이 터져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여자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는 너무 자주 하다 보니 항문 주위 괄약근이 늘어나 변실금으로 팬티를 더럽히고 항문 부위의 섬세한 피부가 딱딱해지기도 한다. 또 항문은 아주 섬세한 피부조직이라서 찢어지기도 한다.

웃기는 것은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 '북상기(北廂記)'라는 책에 18세 기생과 61세 선비의 노골적인 성애 묘사 중 애널섹스를 뜻하는 후정화가 나온다. 그리고 '기이재상담'과 '유년공부'를 번역한 '조선의 음담패설'에는 '내 밤마다 당신 앞구멍을 닦는데, 어찌 다시 상놈에게 뒷구멍까지 닦아 달라 하는가!' '앞구멍은 이미 임자가 있으니 허락할 수가 없고, 뒷구멍은 정한 주인이 없으니 허락하지요' 등 애널섹스에 대한 얘기가 빈번하게 나온다.

조선 춘화에도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안은 채 여자 성기만 드러나고 남자 성기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애널섹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취향은 다양하니 별짓들 다 한다고 욕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남편만 좋아 죽겠고 아내는 싫어 죽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난으로 남편 항문에 청양고추나 오이를 넣어보자고 하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글 성경원 | 자료제공 매경이코노미

발행일 2014.10.06 | 기사입력 2014.10.06

http://mzine.mk.co.kr/v2/index.php?TM=M3&PM=M1&RC=2290〉

④ 집창촌 진 자리에 오피방

구멍을 사고팔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말렸건만 백성들은 말도 꽤 안 듣는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미로같이 좁은 골목길 미아리텍사스, 청량리588, 천호동텍사스 등 오프라인에서 직거래하던 집창촌 명소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성매매는 법에 걸린다니 '장님나라에 애꾸가 왕'이라고 아쉬운 대로 성관계는 갖지 않지만 스킨십을 해드리는 키스방, 귀청소방, 섹시바, 전화방, 인형체험방, 대딸방, 허그방, 건마(건전한 마사지), 나체쇼, 휴게텔, 안마방, 립카페, 조건만남, 샤워방 등 유사행위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글바글 꼬여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자들은 공을 꼭 홀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린다. 따뜻한 질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바깥에서 하는 것은 성에 안 찬다. 덕분에 애인 만나러 가는 척하면서 오피스텔에서 하는 오피방, 호텔에서 술 마신 뒤 2차를 할 수 있는 풀살롱, 유리벽 안 여성들을 골라 술 마시고 성매매하는 매직미러초이스, 족발 배달로 위장한 주택가 성매매, 자극성의 갑(甲)인 물다방, 변태성 최고조 페티시업소, 출장마사지, 노래방과 찜질방까지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상상 이상의 풍선효과로 홍등은 더 깊고 더 은밀해지고 더 교묘하게 불을 밝히며 남성들의 성욕과 지갑을 노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조사 결과 한국 남성의 93.1%는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56.7%가 평생 한 번 이상 성매수한 경험이 있고, 27.2%가 최근 1년간 여자의 아랫동네를 샀다. 평균 24세에 처음으로 성매수를 했다. 예전엔 호기심, 군 입대, 음주를 핑계로 안마시술소(26.3%), 집창촌(26.1%), 유흥주점(23.4%)에서 샀지만 요즘은 온라인 채팅(6.2%)이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했다. 예쁜 언니들은 하루 평균 5.3명에게 구멍을 빌려준다.

창세기에도 나오는 창녀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당연히 여자를 사는 남자도 계속 있어 왔고, 나이와 직업도 상관이 없다. 사정 못했다고 돈 물어내라는 놈도 있고, 아가씨가 코를 골아 기분 나쁘다며 돈 토해내라는 놈에, 미성년자들이 떼로 몰려와 하고 나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진상들도 있다. 그런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어 봐야 수요가 끊임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완전히 뿌리 뽑힐 것 같지가 않다. 조선시대에도 공창이 있었는데 없애자, 안 된다는 논쟁을 벌이다가 이것을 없애면 젊은이들이 남의 여자를 탐하는부도덕이 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우세해서 살아남았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민낯과 속살을 들여다보면 성매매 공화국이 맞다. 어디를 가나 놀아드릴 여자들이 있어 자판기 커피 뽑듯 사고 있다. 무수히 뿌려지는 불법, 퇴폐업소 전단지와 명함이 때 이르게 시들어버린 낙엽처럼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주택가에 주차된 차 앞 유리에도 지천으로 꽂혀 있다. 굳이 엎드려서 명함을 주울 필요는 없다. 세계 으뜸의 IT 강국이라 스마트폰 하나면 족하다. 색다른 스릴과 성적 판타지, 돈벌이 유혹을 쉽사리 떨치기 힘든 일탈은 영

혼을 갉아먹는다.

퇴근 후 남편이 그 많은 지뢰밭을 피해 집으로 곧장 오신다면 아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닐까?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 (www.sexeducation.co.kr) 서울교대·경원대 행정학 박사 / 일러스트 : 김민지]

글 성경원 | 자료제공 매경이코노미

발행일 2014.11.03 | 기사입력 2014.11.00

〈http://mzine.mk.co.kr/v2/index.php?TM=M3&PM=M1&RC=233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의 연재물인 성경원박사의 「성경(性敬)시대」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재물은 '매경이코노미'에 실린 것을 전재하는 형식이지만 적지 않은 칼럼이 성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2015년 2월 2일자 「침대에서 딴 남자 이름 부르는 아내」의 경우 중년 이후의 부부생활에서 아내가 배우자 이외의 애인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잠자리에서 딴 남자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② 2014년 12월 1일자 「스리섬·스와핑은 먼나라 얘기?…」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트리플 섹스나 스와핑의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이는 가정해체의 위기가 높아지고 건전한 성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③ 2014년 10월 6일자 「끝내주게 조여주는 또다른 구멍」은 '애널 섹스'의 생리학적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와 은근히 비정상적인 섹스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④ 2014년 11월 3일자 「집창촌 진 자리에 오피방」이라는 제목의 글은 형식상으로는 '성매매 공화국'에 가까운 우리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변태영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변태업소들의 이름과 형식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 매체 상에서 부적합할 뿐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수 있다.

위 칼럼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게재할 시에는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위 칼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 2014-1118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3월 19일자 1면 「대한민국 新주류/재경향우회 지고 '대치동클럽' 뜬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내기'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핵심 요직을 장악하면서 부유층 자제들의 사교모임으로 치부되던 '대치동클럽'이 '파워엘리트'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지방 출신 인사들이 권력을 대물림하던 '재경향우회'는 신입회원이 급감하면서 조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일보가 19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2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은 12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다. 이는 경남(5명), 부산(3명),

경북(3명), 대구(2명) 등 영남권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숫자다. 충남·충북·대전 등 충청권 출신이 10명이고,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권 출신이 8명이다.

중앙부처에서 서울 출신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직 장·차관급 47명 중 서울 출신은 17명(36.2%)에 달한다. 영남권이 14명이고 호남권(7명)과 충청권(8명)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력 인사들의 지역별 모임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출신들은 명문고·명문대·고시를 거쳐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며 '대치동클럽'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부터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린시절부터 그룹과외를 함께 받으며 자랐다. 대치동 출신의 중앙부처 서기관인 최모(38) 씨는 "초·중학교를 함께 다니다 다른 고교를 나와 대학에서 다시 만난 친구들이 많다"며 "서울 출신들은 고교보다는 주로 동 단위의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명문고 출신들의 '재경향우회'는 최근 신입회원이 없어 조직의 유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 K고교의 행정고시 출신 관료 모임은 올해 신년회에서 2년 만에 신입 회원을 받았다. 전체 회원이 50여 명에 달하지만 10여년 전부터 신입 회원은 한 해 걸러 한 명꼴로 들어온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901070127031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대한민국 新주류' 기획의 두 번째 기사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출신들이 파워엘리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2명 중 12명(23.1%), 현직 장·차관급 47명 중 17명(36.2%)이 각각 서울 출신임을 들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내기'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핵심 요직을 장악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또 『유력 인사들의 지역별 모임에도 변화가 뚜렷하다』며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출신들은 명문고·명문대·고시를 거쳐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며 '대치동클럽'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반면 지방

명문고 출신들의 '재경향우회'는 신입회원이 급감하면서 조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한 '핵심 요직'의 출신지를 광역시 또는 영남·호남·충청권 출신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인원을 나열했다. 그러나 기사의 핵심이라 할 대치동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대치동 출신이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며 '대치동클럽'을 형성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치동클럽'에 대해서는 '부유층 자제들의 사교모임'으로 표현하고, 이들이 부모 세대부터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린 시절부터 그룹과외를 함께 받으며 자랐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기사는 본문에서 기술한 대로 '대치동클럽'이 사교모임인지, 구성원들이 명문고·명문대·고시를 거쳐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한 이들인지, 구성원들이 부모 세대부터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은지, 어린 시절부터 그룹과외를 함께 받으며 자란 이들로 구성됐는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치동 출신 중앙부처 서기관 최모(38)씨의 발언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최씨의 발언도 『서울 출신들은 고교보다는 주로 동 단위의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는 막연한 내용일 뿐 '대치동클럽'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기사대로라면 대치동클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2명 중 서울 출신이 23.1%라는 분석은 서울의 인구 구성비 20%(2012년 기준, 통계청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치다.

그런데도 기사는 '서울내기'들이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으며, 실체도 불분명한 '대치동클럽'이 파워엘리트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편집자는 이를 바탕으로 큰 제목을 「재경향우회 지고 '대치동클럽' 뜬다」로 달고 작은 제목에 「그룹과외 받으며 친분 중앙부처 핵심요직 진출」을 넣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의도된 기획 의도에 따라 추측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또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 편향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야기하고 독자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

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영남일보 2014년 4월 26일자 1면「새누리, 대구시민 우롱하나?/시장후보 경선일 하루만에 29일로 앞당겨/경선방법도 일방적 변경」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이 대구를 우롱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25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경선일을 4월29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루 만의 번복이다.

중앙당 공천위는 전날(24일) "새누리당은 대구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을 4월30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칙없는 오락가락 결정이다. 새누리당 중앙당이 대구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경선 방법도 일방적으로 변경됐다. 2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후보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정견발표도 갖기로 했다. 당초 중앙당 공천위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최소한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합동연설회 없이 투표만 진행하기로 했다.

경선일과 경선방법을 바꾼 데 대해 명확한 설명도 없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경선과 겹쳐서라고만 했다.

대구시당 측은 "중앙당에서 어제(24일) 30일 조용히 치르라고 해서 30일로 확정했는데, 오늘(25일) 갑자기 29일 합동연설회 방식으로 치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구지역 당원들은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당원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426.0100107153100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로 연기를 거듭했던 대구시장 후보의 경선일과 경선 방법을 결정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대구, 부산,충남, 대전, 강원 등 5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4월 30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5일『대구지역 기초단체장 경선과 겹쳐서』라는 것 말고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경선일을 4월 29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선방법도 당초에는 '세월호' 참사를 감안해 합동연설회 없이 투표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후보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정견발표도 갖기로 방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취재기자는 이에 대해『원칙 없는 오락가락 결정』이라면서『새누리당이 대구를 우롱하고 있다』,『새누리당 중앙당이 대구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런 조치가 왜 대구 우롱, 대구 무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편집자도 '우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새누리, 대구시민 우롱하나?」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월 30일에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5개 지역 가운데 대구뿐이 아닌 충남 지역도 경선일을 4월 29일로 하루 앞당겼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4월 30일에 치르기로 예정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됐다.

위 기사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일을 번복한 것은 새누리당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다른 신문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변경했다는 중앙당 고위 당직자의 설명을 별도로 취재해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설명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특정 정당이 내부사정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과 방법을 바꾼 것을 놓고 그 이유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해당 지역 시민들을 무시했다거나, 우롱했다는 식으로 비판한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고 과장이며,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90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中都日報 2014년 10월 10일자 1면 「포항 '특구뺏기 꼼수'/특구 지정조건 충족 못하자 '창조경제 특별법' 발의/비슷한 역할 이름만 바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지역 정치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연구소 추진 난항으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지난 5월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된 대부분 법·제도적 지원을 담았다.

포항은 경주와 함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인 출연연 3곳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포항분원(양성자연구센터)을 유치했다. 나머지 한 곳은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과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통합해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던 가속기연구소 유치였다.

그러나 가속기연구소 설립이 기재부 및 충청권 지역 정가의 강한 반대로 난항에 부딪히자,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연구개발특별법과 비교할 경우,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대부분 내용을 일치하다는 것이 대덕특구 출연연의 반응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새로운 경제체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조성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 제2조에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결국, 창조경제의 첨병기지로 지정된 대덕특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인 꼴이다.

창조경제선도지역 지원액은 연평균 201억원 정도로 책정, 결국 유사한 사업에 대한 육성으로 중복 투자라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국정기조가 차기 정권에서 사라질 경우, 관련 특별법도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우세하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성장한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조경제 선도지역 선정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1009027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는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역이 '연구개발특구'와 다름없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포항과 경주 지역을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으려던 당초 목표가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렵게 되자 연구개발특구의 법적 근거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기초과학시설과 산업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대덕, 대구, 광주, 부산 등 4곳으로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기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창조경제선도지역'의 기능이 '연구개발특구'와 유사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창조경제선도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연평균 201억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육성으로 중복 투자라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에 들어가야 할 지원금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포항이 '창조경제선도지역'이 되면 대덕 특구에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 때문인지 中都日報는 기사의 큰 제목도 「포항 '특구뺏기 꼼수'」라고 달았다. '특구뺏기'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연구개발특구로 가야할 몫을 포항이 빼앗으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사에는 경제 중추 지역 가운에 하나인 포항을 '창조경제선도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무엇 때문에 '꼼수'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기사는 '창조경제선도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조경제선도지역 선정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의 언급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예산이 있으면 기존 특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기사는 특히 특별법 발의가 '꼼수'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이 의원 측의 해명이나 반박은 반영하지 않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과 확대해석을 근거로 작성됐으며, 특정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44 신문윤리강령 위반
인천일보 발행인 박 길 상

〈주문〉

인천일보 2014년 11월 4일자 20면 「문화·스포츠 감성복음…더불어 사는 세

상 만든다/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30만평 호평…한폭에 담긴 위대한 모성/'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부천 교회·분당 예루살렘성전 전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인천일보는 기독교계 신흥종교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참여하거나 주최한 음악회와 마라톤 대회, 전시회를 소개하면서 홍보성 색채가 짙은 제목에다 감성적 표현을 담은 문구, 선교 색채가 강한 메시지를 곁들여 1개 면 전체를 할애해 위 적시 2건의 기사를 통해 대서특필했다.

특정 교파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처럼 제작된 이 같은 지면은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6645〉

▲ 2015-1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주문〉

朝鮮日報 2015년 1월 15일자 A12면「'범죄 시한폭탄' 不法체류자 20만명… 손놓은 정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2일 여성의 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이 남자는 촬영한 사진을 다른 외국인 친구 등에게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엔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베트남 출신 남성(38)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뒤 4곳 이상 지점에 나눠 버려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중국인 박춘봉(56)도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과 달리 불법체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지 않아 검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지난 6일 30대 여성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38)를 붙잡는 데 경찰은 2개월가량 수사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8년 2만623명에서 2012년 2만666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집계된 숫자가 1만6922명에 달했다. 이 중 38.1%가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범죄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체류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만5205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20만87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4년만을 비교해보면 불법체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3년 21만9418명에 달했던 일본의 불법체류자 수는 2008년 11만3027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5만명대로 급감했다. 체류 외국인 수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의 불법체류율은 2.8%이지만 한국의 불법체류율은 지난해 기준 11.6%에 달했다.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법무성에 법무, 노동, 경찰 합동기구인 '불법체류자 대책 관계국장 연계회의'를 설치해 부처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 정부는 핵심 정책으로

400여명이었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경비관 수를 100% 늘려 850명으로 증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반면 우리 출입국당국의 단속 인원은 150명에 그치고 있다. 일본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69명을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직원 1명은 불법체류자 1353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출입국 당국 내부에서도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범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사례를 배워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가적 불법체류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5/2015011500189.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38.1%가 5대 강력범죄였고,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범죄를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박춘봉 사건 등 3건의 외국인 범죄를 예시하고, 외국인 범죄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불법체류자도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이 저지른 강력 범죄 가운데 상당수를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이라는 경찰 추정을 소개해 마치 외국인 범죄 증가가 불법체류자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기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범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경찰대 이동희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며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제목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범죄 시한폭탄' 不法체류자 20만명… 손놓은 정부」라고 달았다. 2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이며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에는 외국인 범죄 중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외국인이 저지른 5대 강력 범죄 중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는 경찰 추정이 전부다.

기사는 또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것이 외국인 범죄의 대책인양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사례를 배워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가적 불법체류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불법체류자 감소가 외국인 범죄 증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근거도 없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전체를 잠재적 흉악범죄자로 보고 사회 문제시했다는 점에서 과장보도라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 차별을 조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2.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 문〉

中都日報 2015년 1월 27일자 1면「文〈문재인〉, 충청총리 비하 망언…지역민 분노」기사의 제목, 충청투데이 1월 27일자 1면「문재인 지역주의 망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中都日報,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中都日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이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의원(부여·청양)의 국무총리 발탁을 비하하면서 지역 정치권 등 충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세월호 협상에서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해온 이 의원의 총리 내정에 야당내에서도 소통의 기대감이 적지 않은 가운데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역 민심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과거 충남지사와 충남·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며 원안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내던졌던 인물이다.

이에 충청민들로부터 지역의 이익과 자존심을 대변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충청민들의 염원인 충청 대망론의 후보군으로도 꼽힌다. 이 가운데 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차기 당권주자인 문 의원의 충청권 출신 총리내정자에 대한 비하는 충격이 적잖을 전망이다.

야당의 대표주자가, 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광역단체장 석권이라는 기회를 준 것을 두고 본인 스스로 "충청지역의 중요성이 정치적으로도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던 충청민의 대표격 인사를 무시한 셈이 문제인 것. 때문에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전경제계의 한 원로인사는 "충청인 출신 총리가 잘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새 총리 내정 이후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는 뒷북은 충청지역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말과 다름 없다"며 "그동안 충청지역은 정치·경제적으로 영남권과 호남권에 밀려, 보이지 않는 홀대를 받은 만큼, 이번 충청권 총리를 통해 국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총리라는 자리가 사람으로 뽑는 자리지, 출신을 보고 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충청인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중략)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충청권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4개 시·도당은 이날 문 의원이 충청민을 무시하는 망발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문 후보의 눈에는 대전·충청인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제1야당의 당대표 후보라는 사람이 당권에 눈이 뒤집혀 아직도 지역주의 망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중략)

야당 측마저 문 의원의 발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충청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공식적인 멘트를 자제하고, 이후 몰아닥칠 후폭풍에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해내려면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며 충청권 출신인 이 의원의 총리 발탁을 비하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신임 총리 내정자는 또다시 예스맨"이라며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영남 출신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경쟁자인 박지원 의원이 득세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1260298〉

(충청투데이)=『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사진〉가 "국무총리는 당연히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충청권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대부분의 정권에서 소외받거나 차별받았고, 경상·전라권으로 대변되는 정치 구도 속에서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지역차별주의적 인식을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말 아쉽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정치로 통합에 실패한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해내려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 다시 예스맨으로,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의문시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지역 정계는 물론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며, 문 후보를 비판했다.

우선 새누리당 대전과 세종, 충북·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당과 새누리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의 당대표 후보라는 인물이 당권에 눈이 멀어 아직도 지역주의 망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민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익을 위해 세종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기획했던 분이다. 노 전 대통령의 적장자로 불리는 정치인이 '당대표'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지역차별주의적인 발언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문 후보측 관계자는 "현 정권 인사에서 홀대가 극심한 호남을 국민 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뜻에서 호남권 총리의 필요성과 희망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8142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 충청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새 총리 후보로 새누리당의 충청 출신 이완구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사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월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통합을 해내려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 다시 예스맨으로,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의문시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中都日報는 이 같은 발언이 『충청 대망론의 후보군』으로도 꼽히는 『충청권 출신 총리내정자에 대한 비하』라고 해석하고 새누리당 충청권 4개 시·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당권에 눈이 멀어 아직도 지역주의 망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한 내용 등 충청 지역 여론을 두루 묶어 함께 보도했다.

충청투데이는 『지역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노출』고 시켰다고 지적하고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위 충청투데이 기사에도 소개된 대로 "현 정권 인사에서 홀대가 극심한 호남을 국민 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뜻에서 호남권 총리의 필요성과 희망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 화해와 통합, 즉 지역갈등 극복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을 언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 두 신문이 전한 충청지역 여론, 즉 『지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지역차별적 인식』이라는 비판과는 시각과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中都日報는 기사 큰 제목을 「文〈문재인〉, 충청총리 비하 망언…지역민 분노」, 충청투데이는 「문재인 지역주의 망언」이라고 각각 달았다. 문 의원 측의 해명에 상관없이 '망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충청총리 비하 망언'과 '지역주의 망언'이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린 것이다. '망언'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지역주의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

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21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문〉

全北日報 2015년 1월 22일자 1면「"호남KTX 서대전 경유 고집 땐 도민 전체 새누리에 등 돌릴 것"/與, 오늘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 개최/"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도 중단을" 지적」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전북의 장기발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진정성이 없는 1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도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호남고속철 KTX 서대전역 경유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격앙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이 이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전북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2일 전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것들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큰 무리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과 관심은 이들 안건에 대한 틀에 박힌 논의보다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KTX 서대전역 경유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새로운 현안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 증설되는 20회중 18회를 서대전을 경유케 하겠다는 내용의 KTX 서대전역 경유 계획은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최혜연 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낸 '총선용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도민들은 "충청권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꼼수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전남북 550만명의 국민들이 모두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호남에서 '이정현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남고속철 KTX 서대전역 경유 방안은 철도공사가 제출한 운행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최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많은 도민들은 "고속철도 건설의 기본취지를 벗어난 황당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대전을 경유하면 서울에서 익산까지의 운행시간이 현재에 비해 불과 4분 앞당겨지기 때문으로 "겨우 4분 단축하기 위해 10년동안 9조원을 투자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남고속철은 경부고속철에 비해 10년이나 늦은데다 운행횟수도 크게 적어 새로 증설되는 20회를 모두 합해도 하루 82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가뜩이나 운행횟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대전에서 무더기로 빼가면 도민들은 KTX를 아예 이용하지 말하는 뜻"이라며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면서 이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 전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한때 전국 6~7대 도시에서 이제는 20위권에 간신히 포함될 정도로 몰락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전북이 극한적인 상황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1949년 기준 전국 인구의 10.16%, 1962년 기준 전국 총생산의 8.79%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인구 3.6%, 지역총샌산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재산세 징수액은 전국의 1.8%, 취득세는 2.6%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3%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탕평인사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을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면 도민들도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배척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3789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北日報는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1월 22일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데 맞춰 KTX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최혜연 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낸 '총선용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도민들은 "충청권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꼼수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전남북 550만명의 국민들이 모두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중략)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 기사 큰 제목을 「"호남KTX 서대전 경유 고집 땐 도민 전체 새누리에 등 돌릴 것"」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는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어떤 경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표출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도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전북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 대목도 구체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기사는 서대전역 경유 문제의 정치적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했지만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위 기사가 보도되기 전날인 1월 21일 서대전역 통과를 지지·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안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실체가 불분명한 '도민들'을 내세워 기자 개인 또는 소수집단의 의견을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양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5년 1월 30일자 5면 「원내대표 경선 경북지역서 배신자 나올라/◆대구-경북 의원 미묘한 기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선 가운데 대구 국회의원과 경북 국회의원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아닌 이주영 의원 쪽에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판세 분석에 나선 지역 정치 관계자들은 경북 지역 15명 의원 중 이탈자가 최소 5명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북 지역의 A·B·C 의원은 이 의원 측으로부터 당직을 제안받았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우리가 똘똘 뭉쳐 무너진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지역 정서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탐대실(小貪大失)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130.01005073230000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구 동을 출신 유승민 의원과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 이주영 의원이 경합을 펼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출신 의원들 표의 향방을 짚어본 『소문도 들린다』 식의 가십성 기사다.

요지는 『대구 지역의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아닌 이주영 의원 쪽에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이탈자』라고 표현하는 등 『유승민 의원이 아닌 이주영 의원 쪽에 붙었다』는 것을 비정상인 양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말미에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우리가 똘똘 뭉쳐 무너진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지역 정서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탐대실(小貪大失)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문제발언을 여과 없이 소개한 것이다.

게다가 편집자는 큰 제목을 「원내대표 경선 경북지역서 배신자 나올라」라고 달았다. 이주영 의원을 지지하면 '배신자'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갈등과 분란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